

|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2010 |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 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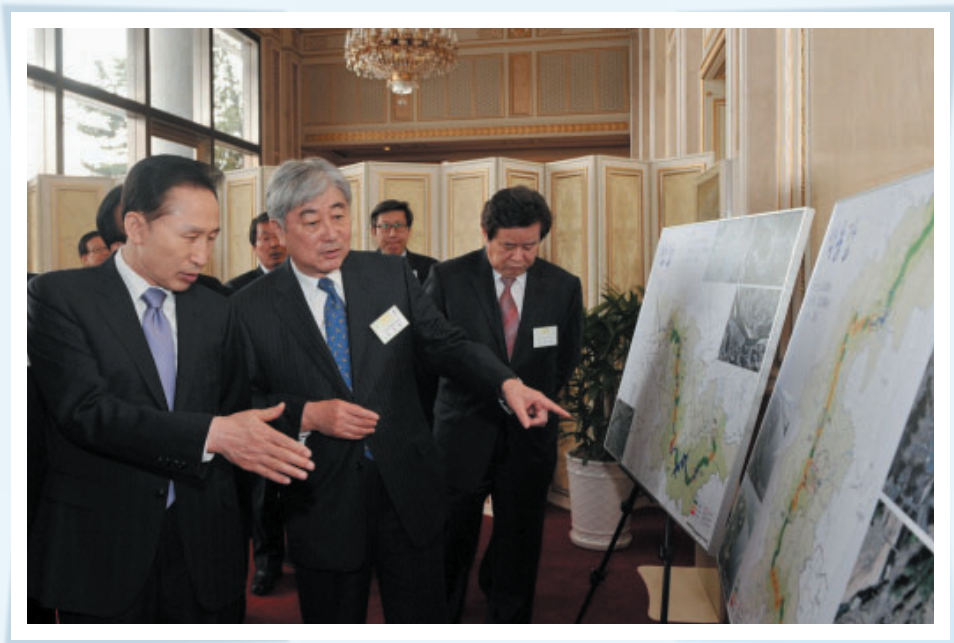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장 입장



▲ 위원회 참석자들과 환담



▲ 위원회 보고 관련 전시관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현판식



▲ 위원장 주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해피하우스 센터(전주 인후) 개소식

| 발 간 사 |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구현

- 집, 사무실, 학교, 관공서, 공공공간 등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건축환경은 우리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우수한 건축 환경 역시 우리 산업의 기초가 되어 나라의 경제력을 뒷받침합니다.
- 글로벌 시대, 건축·도시환경의 품격 또한 국가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건축·도시환경은 국가의 고유한 자산으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건축·도시환경 조성만이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가 경제만 빠르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건축문화를 가진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는 ‘양적 성장’의 개발시대에서 ‘질적 도약’의 지식문화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국토관리·지역개발·도시계획 등 거시적 측면에서부터 녹색환경·디자인·건축문화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미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건축·도시분야의 범위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국토공간에 큰 밑그림을 그리고, 경쟁력 있는 건축문화와 품격 있는 국토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소속위원회로 지난 2008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지난 2년여간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인 건축·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건축·도시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 먼저 건축·도시분야의 최초 중장기 국가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국가 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국가상징거리 조성', 새로운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뉴하우징 운동',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 그동안 우리 국토품격 분야는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국가경영에서 건축·도시정책을 통한 국토품격의 향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고, 그간의 활동을 통해 건축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제1기 위원회 활동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건축문화 진흥과 그 밑바탕이 되는 건축정책, 그리고 도시를 비롯한 국토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며, 이러한 역할은 매력적인 건축과 도시를 조성하여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위원회 활동의 역할과 책임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건축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로 바꾸어 나가는 데 본 보고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끝으로 2년여 동안 더 나은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 주신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기획단 관계자,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건축·도시분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4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 상 정

이 상 정

차례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제1장 위원회 현황

제1절 설립배경	14
제2절 위원회 구성	17
제3절 주요기능과 역할	20
제4절 외국의 관련 위원회 현황	22

제2장 주요활동

제1절 대통령 보고회의

1. 제1차 대통령 보고회	26
2. 제2차 대통령 보고회	26
3. 제3차 대통령 보고회	27

제2절 위원회 자체회의

1. 본회의	29
2. 분과회의	29

제3절 위원회 주최 행사

1. 정책토론회	33
2. 업·단체 간담회	34
3. 워크숍	38

제3장 활동성과

제1절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1. 추진배경	42
2. 추진경과	45
3. 주요내용	47
4. 성과 및 의의	50

제2절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 수립

1. 추진배경	52
2. 추진경과	54
3. 주요내용	55
4. 성과 및 의의	63

제3절 단독주택 에너지효율 및 생활환경 개선

1. 추진배경	64
2. 추진경과	65
3. 주요내용	66
4. 성과 및 의의	71

제4절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1. 추진배경	72
2. 추진경과	73
3. 주요내용	74
4. 성과 및 의의	78

제5절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1. 추진배경	79
2. 추진경과	82
3. 주요내용	82
4. 성과 및 의의	87

제6절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1. 추진배경	88
2. 추진경과	88
3. 주요내용	89
4. 성과 및 의의	92

제7절 국토환경 디자인정책의 기본원칙 제시

1. 추진배경	93
2. 추진경과	94
3. 주요내용	95
4. 성과 및 의의	97

제8절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1. 추진배경	99
2. 추진경과	101
3. 주요내용	102
4. 성과 및 의의	106

제9절 기타 추진과제

1. 공공건축 품격향상 및 효율적 관리	108
2.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112
3. 저탄소 건축물 실현	116
4.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	119
5. 해외도시개발(도시수출) 활성화	121
6. 건축행정 제도개선	124

부 록

1. 위원 명단	128
2. 위원회 활동일지	129
3.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138
4. 기획단 직원 명단	143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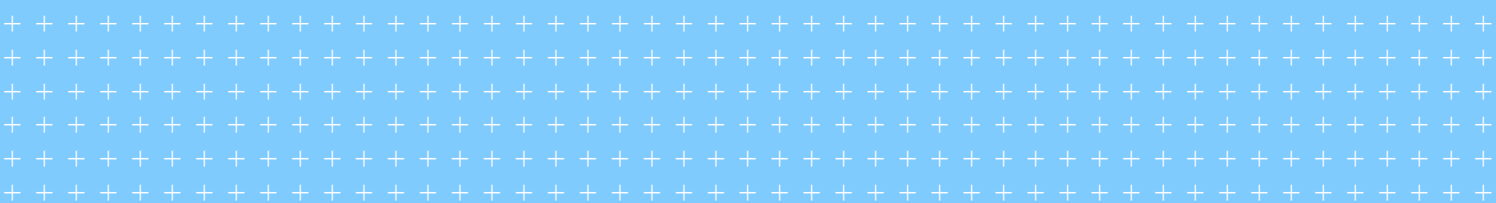
| 위원회 현황 |

제1절 설립배경

제2절 위원회 구성

제3절 주요기능과 역할

제4절 외국의 관련 위원회 현황



제 1 절

설립배경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은 개발시대의 획일적인 공급중심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토환경의 품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급속한 양적 충족은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국토환경디자인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그동안 우리의 건축문화는 지역적 특성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개발방식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화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 부처별로 공공시설물을 건설하고 있으나 건축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가격경쟁으로만 선정하는 설계사와 시공자로는 독창적인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정부부처 간 원활한 정책조율과 조정체계가 없어 중복투자의 문제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까지 초래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환경을 구성하는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이 디자인과 질적인 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는 세계적이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만 보더라도 우리의 건축문화유산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할 수 있다.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등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문화유산이자 세계인이 인정하는 우리의 건축문화유산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이런 훌륭한 건축자산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발달한 현대에는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개발시대 양적 성장에서 문화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로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건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건축정책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국토환경디자인을 개선하고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품격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기본법」(법률 제8852호)을 제정·공포하였으며, 동 법에 건축분야 중요정책의 심의와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기능을 담당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건축기본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과 함께 2008년 6월 22일 시행하였고,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인선작업을 거쳐 2008년 11월 19일 처음으로 민간위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12월 1일에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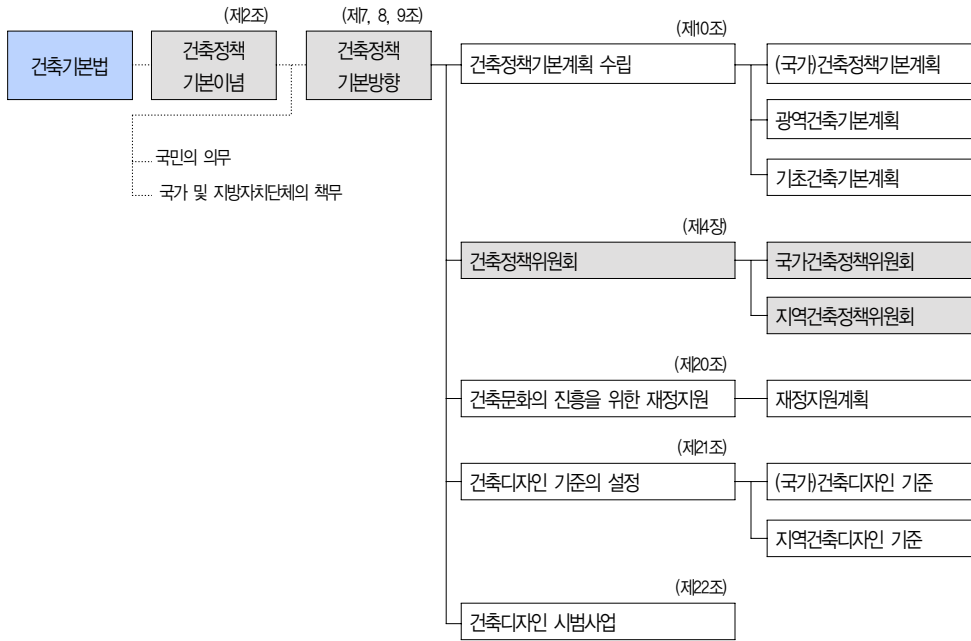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현판식 ■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2008년 12월 10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명원 위원장을 비롯, 13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촉식에 이어 대통령 주재하에 민간위원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 일반현황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녹색 국토건축환경 구축’ 및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 등 역점 추진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위원회 운영세칙, 기획단 운영규정 등을 심의·확정한 후 2009년 1월 2일 위원회 사무국인 국가건축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발족되어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이는 건축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최초의 법정기구인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건축의 공공성 구현과 문화적 가치향상 등 국토환경디자인의 질적 수준 제고와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위원회의 설립근거법인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체계는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제 2 절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 위원과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임기 2년의 위촉위원으로 나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2008년 12월 최초 위원회 발족 당시 당연직 위원은 15개 부(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의 장관과 법제처장 등 16명이었으며, 위촉위원은 건축·도시·조경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13명을 위촉하였다(위촉위원 명단 <표 1> 참조).

또한, 동 위원회는 위원회 훈령에 따라 위촉위원 간 원활한 업무협의 처리 등을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을 두었고, 위원회 간사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단 단장(국토해양비서관 겸직)이 된다.

┃ <표 1> 위촉위원 명단 ┃

성 명	약 력	비 고
정 명 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원장	위원장
김 광 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김 영 섭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김 인 철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김 혜 정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류 춘 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손 세 관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안 건 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양 윤 재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 진 숙	충남대 건축학부 교수	
채 선 업	동부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최 두 남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최 명 철	단우건축사사무소 대표	운영위원

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인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두었고,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의 희망과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1명의 위원이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원 8인과 당연직위원인 국토해양부장관 등 9명으로 각각 구성·운영하였다.

▣ <표 2>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

구 분	성 명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김혜정(분과위원장), 김광현, 김영섭, 김인철, 안건혁, 양윤재, 채선엽, 최명철,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손세관(분과위원장), 김광현, 류춘수, 안건혁, 양윤재, 이진숙, 채선엽, 최두남,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김인철(분과위원장), 김영섭, 김혜정, 류춘수, 손세관, 이진숙, 최두남, 최명철,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동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그리고 계약직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두었고, 발족 당시 기획단은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 겸임하는 기획단장 외에 부단장, 전문계약직인 2인의 협력관과 전략기획과·건축진흥과·건축디자인과·도시디자인과 4개과 25명의 정원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 <표 3> 기획단 정원표 ▣

구 분	발족 당시	2010.8.2. 이후
고위공무원단(부단장)	1	1
계약직 또는 일반직 3급·4급(협력관)	2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과장)	1	1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과장)	3	2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3
시설사무관	6	6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1	1
정부투자기관 및 유관기관 파견	5	5
기능직·위원회 상근직 또는 사무보조원	3	3
합 계	25명	23명

이후 2010년 8월 2일부터는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기획단 조직을 협력관 1명과 과장 1명을 각각 감축하여 부단장 1, 협력관 1, 전략기획과·건축진흥과·건축디자인과 3개과 정원 23명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림 2> 위원회 조직도('10.8.2. 이후) ▣

또한,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서 건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제별로 필요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TF’, ‘뉴하우징 운동 TF’,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TF’ 등을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제 3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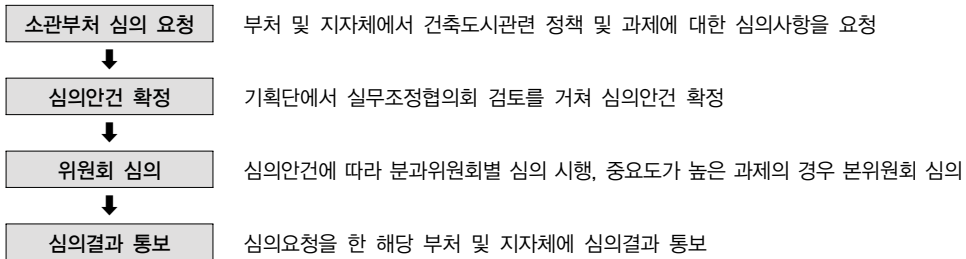
주요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의 「건축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건축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세부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설계 등에 대한 심의·조정 4. 건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1. 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추천에 관한 사항 4. 지속 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5.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한다.



▣ <그림 3> 건축정책관련 심의 절차 ▣

또한 기획단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그 밖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2010년 8월 2일 이후 개편된 조직에 따른 기획단의 각과별 업무분장은 <표 4>와 같다.

▣ <표 4> 기획단 과별 업무분장 ▣

과 명	주요 업무
전 략 기획과	위원회 운영 및 회의개최,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운영, 관계부처 정책조정, 인사·예산·회계·감사·국회업무, 건축선진화 제도개선, 위원회 업무지원 등 사무업무 등
건 축 진흥과	주요 건축정책 수립, 건축정책기본계획 심의·검토,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저탄소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 한옥 보전·진흥 및 세계화, 건축관련 첨단기술개발 지원, 건축관련 제도, 법령 및 기준의 개선, 공공건축, 공공시설물의 품격 개선 등
건 축 디자인과	지속가능 경관조성 및 환경개선, 도시·마을 환경개선사업, 공원녹지 개선·확충, 도시공간 제도개선,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도시재생 기획·설계, 공동주택 외관 및 단지환경 개선,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

위원회의 일반적 업무처리 절차는 합동연석회의에서 후보과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 그리고 국정철학 등을 고려해 과제 리스트를 선정하면, 과제 성격에 적합한 담당 분과위원회를 선정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 합동연석회의에서 심층검토 결과를 기초로 논의를 확정한다.

과제검토는 기획단의 사전검토, 분과위 배정, 분과위 검토 등을 거쳐 합동연석회의에서 최종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분과위 및 합동연석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과제를 검토함과 아울러, 관계부처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후 반영하며, 타 위원회와 중복성이 있는 과제는 위원회 간 사전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과제담당 주체를 결정한다.

제 4 절

외국의 관련 위원회 현황

가. 네덜란드의 국가건축자문위원회 BNA

국가건축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덜란드의 국가건축자문위원회 BNA(The Royal Institute of Dutch Architects)는 ‘건축·도시 관련 부처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방식’, ‘공공건축에 관한 계획 및 설계절차’, ‘공공공간과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등 국가건축물에 대한 관리, 인프라 확충, 법률제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공간계획·문화유산·시각(공공)예술·정책 팀으로 구성되어 각 해당 전문가들이 네덜란드의 공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제시 및 전문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프랑스의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 CAUE

프랑스 건축법을 근거로 구성된 프랑스의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 CAUE(Conseils d'Architecture d'urbanisme et d'environnement)는 건축문화유산국 산하에 있는 정부조직으로 건축과 도시계획, 환경에 대한 정부 자문기구로서 건축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로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자문, 보존지역에 계획되는 모든 건축물 및 토지 이용에 대한 심의·조정,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건축물의 보존 및 관련계획의 심의를 담당한다. 또한 지자체 및 개별주체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 및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과 함께 설계경기조직, 교육자료 발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다. 스코틀랜드의 건축디자인위원회 A+DS

국가 차원에서 건축과 디자인 관련정책을 자문하는 스코틀랜드의 건축디자인위원회 A+DS(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는 공공사업의 계획 및 발주과

정에 관여하는 조직으로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 등의 시설물과 도시 및 전원개발에 관한 디자인영역까지 관여한다.

새로운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설계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디자인 채택을 유도하는 계획 전반을 자문하는 한편, 정책지원과 관련 연구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라. 영국의 건축위원회 CABE

영국의 건축위원회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건축·도시·조경 등 공공공간에 관련된 민간전문가와 디자인 리뷰 패널, 업무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1999년부터 정부의 건축정책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행하고, 주요정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해 보고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영국의 건축정책에 관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정리한 리뷰보고서를 발행하였다.

특히 디자인 리뷰패널을 구성하여 공공건축, 학교시설, 런던올림픽 관련 프로젝트 등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및 공공공간 디자인과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 전문 디자인 기술 지원, 교육여건 개선, 기술개발 장려 및 연구개발, 캠페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분야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 2 장

| 주요활동 |

제1절 대통령 보고회의

제2절 위원회 자체회의

제3절 위원회 주최 행사



제 1 절

대통령 보고회의

1. 제1차 대통령 보고회

위원회는 2009년 3월 30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첫 대통령 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민간위원 13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7명 등 총 20명의 위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경제·국정기획 수석, 대변인, 국토해양·지역발전·미래비전 비서관, 서울특별시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안전보고가 있었는데, 먼저 위원장이 ‘위원회 현황 및 활



▶ 제1차 대통령 보고회의 모습 ▶

동’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이어서 양윤재 위원이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에 대하여, 손세관 위원이 ‘뉴하우징 운동’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채선엽 위원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에 관하여 각각 보고를 하였으며, 안전보고에 이어 위원장 주재로 보고안전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2. 제2차 대통령 보고회

제2차 대통령 보고회의는 지역발전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합동보고회 형식으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를 2009년 4월 27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였다. 보고회의의 목적은 3개 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간위원 59명(지역위 17명, 녹색위 29명, 건축위 13명)과 정부위원 23명(장·차관

등 18명, 국책연구원장 등 5명)이 참석하였고, 4대강 주변 자치단체장 5명(경남·경북지사, 전남지사, 충주시장, 부여군수), 녹색성장 협의체 대표 2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구상의 필요성과 사업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전략에 따른 실천과제 등을 담은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구상’을 보고하였으며, 그 외에도 6개 안건에 대한 보고와 보고안건에 대한 종합토의가 이루어졌다.



■ 제2차 대통령 합동보고회의 모습 ■

3. 제3차 대통령 보고회

위원회의 제3차 대통령 보고회의는 2010년 5월 3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렸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민간위원 11명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차관 등 정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토연구원 원장, 건축·도시분야 전문가, 청와대의 경제특보를 비롯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과 관계비서관 등이 참석하였다.



■ 제3차 대통령 보고회의 모습 ■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보고가 있었다. 첫 번째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두 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보급자리주택 품격향상방안’을, 세 번째로 손세관 위원이 ‘국경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을,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장이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위한 친수지역 활용방

안’을 각각 보고하였으며, 안전보고에 이어 위원장 주재로 보고안전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표 5】 위원회 개최현황

연 도	총 계		본 회 의				분과회의	
	개최실적	안전 수	개최실적	안전 수	주재		개최실적	안전 수
					대통령	위원장		
2008	1	3	1	3	-	1	-	-
2009	25	51	4	7	2	2	21	44
2010	20	47	5	10	1	4	15	38
계	46	101	10	20	3	7	36	82

제 2 절

위원회 자체회의

1. 본회의

제1기 위원회 임기 동안 7회의 본회의(대통령보고회의 3회 제외)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일자, 상정안건 등은 <표 6>과 같다.

▶ <표 6> 본회의 개최현황 ◀

구 분	회 의 일 자	상 정 안 건
제1차	2008.12.30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②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운영규정 심의 ③ 건축기본계획 작성지침 심의
제2차	2009.09.04	2009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심의
제3차	2009.12.08	건축디자인 기준 심의
제4차	2010.04.13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심의
제5차	2010.04.19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안 심의
제6차	2010.07.29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제7차	2010.11.29	①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심의 ②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보고 ③ 공공건축물 품격향상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

2. 분과회의

제1기 위원회 임기 동안 본회의 안건의 검토 및 사전 심의 등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 합동의 합동연석회의 20회와 정책조정분과위원회 9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5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2회 등 16회의 개별 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36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일자, 상정안건 등은 <표 7>에서 <표 10>까지와 같다.

【 표 7 】 합동연석회의 개최현황

연 도	차 수	회 의 일 자	상 정 안 건
2009	제1차	05.26	①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② 건축디자인 기준수립 추진현황 ③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시행계획(안) ④ 수변도시 비전공모 추진계획(안) 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전략
	제2차	07.21	① 위원회 추진과제(안) ② 건축행정 제도개선 추진현황 ③ 건축·도시문화 포럼 추진방안 ④ 위원회 중점과제 설명자료
	제3차	08.25	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 ② 도시공간 환경디자인 강화방안 ③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④ 국건위 1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 ⑤ 하반기 대통령 보고회 추진방향 ⑥ 위원회 중점과제 추진현황 ⑦ 수변도시 비전공모 추진현황 ⑧ 위원회 자문위원 등 위촉 절차
	제4차	10.13	① 위원회 추진의제 ② 하반기 대통령 보고 주제
	제5차	11.03	① 건축정책기본계획(안) ② 보금자리주택 디자인·품질 혁신방안 ③ 한옥 육성방안
	제6차	11.17	① 보금자리주택 디자인·품질 혁신방안 ② 국토 재창조를 위한 수변도시 비전 ③ 한옥 육성방안 ④ 중점과제 추진현황 ⑤ 위원회 과제 추진방법 개선방안
2010	제1차	01.08	①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② 보금자리주택 디자인·품질향상방안 ③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 ④ 한옥보전 및 활성화 방안 ⑤ 건축물 에너지 절감방안 안건 발굴 검토 ⑥ 위원회 홍보브로셔(안)
	제2차	01.25	① 수변도시 비전공모 심사결과 보고 ② 수변도시 비전공모 수상작 선정 토의 ③ 수변도시 비전공모 시상계획(안) 보고 및 토의
	제3차	02.09	수변도시 비전공모 심사결과 관련
	제4차	03.03	①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② 보금자리주택 품질향상방안 ③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방안 ④ 국토품질 재창조를 위한 친수공간 활용방안

연 도	차 수	회 의 일 자	상 정 안 건
2010			⑤ 대통령 보고회시 토의주제 ⑥ 위원회 홍보브로셔안
	제5차	03.30	①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 ② 신규 보고안건 발굴 검토
	제6차	04.13	① 제3차 대통령 보고회 보고안건 ② 제3차 대통령 보고회 준비일정, 행사계획 보고 및 토의 ③ 제3차 대통령 보고회 토론진행 방향보고 및 토의
	제7차	04.20	제3차 대통령 보고회 토론진행 및 행사 준비사항 등 논의
	제8차	05.19	① 안건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 ② 「토론회」 추진계획(안)
	제9차	06.08	「토론회」 추진계획(안)
	제10차	07.22	① 토론회 개최결과 및 조치계획 ② 연구용역 추진현황(공공건축) 및 계획 ③ 기획단 별도정원 등 보고
	제11차	08.31	도시분야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안)
	제12차	09.28	① 제4차 대통령 보고회의 상정 예정안건 준비현황 ②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백서 발간 추진
	제13차	10.29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최계획(안) ②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③ 공공건축 품격향상 및 에너지효율 제고방안 ④ 제1기 위원회 백서 발간 계획
제14차	11.09	①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② 공공건축 품격향상 및 효율적 관리방안	

▶ <표 8>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현황

연 도	차 수	회 의 일 자	안 건 명
2009	제1차	02.12	건축기본계획 초안 논의
	제2차	03.04	건축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제3차	03.13	건축기본계획 수립내용 검토
	제4차	04.15	건축기본계획 수립관련 총론 검토
	제5차	04.28	건축기본계획 수립관련 각론 검토
	제6차	05.08	건축기본계획 수립 총괄 검토
	제7차	08.25	건축기본계획(안) 총괄 검토
	제8차	10.28	건축기본계획 수정안 총괄 검토
2010	제1차	10.18	도시품격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개선방안

【표 9】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개최현황

연도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2009	제1차	01.22	국토환경개선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방향 논의
	제2차	05.15	건축디자인 기준수립 방향논의 및 사전 검토회의(1차)
	제3차	07.03	건축디자인 기준 사전 검토회의(2차)
	제4차	09.03	① '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② 도시공간 환경디자인 강화방안 ③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제5차	10.13	'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안 심의

【표 10】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개최현황

연도	차수	회의일자	상정안건
2009	제1차	06.18	중점 추진과제 검토 및 분과위 운영방안 토의
	제2차	08.13	건축문화진흥 과제협의

제 3 절

위원회 주최 행사

1. 정책토론회

제1기 위원회는 건축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다.

첫 번째 정책토론회는 ‘기회의 한국건축’이라는 주제로 2010년 6월 30일 14시에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위원회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로 구성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이 주관하였으며, 건축 관련 산·학계 관계자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1·2부로 나눈 토론회의 1부에서는, 국토해양부 김일환 과장의 ‘한국 건축의 현황 및 발전방향’, 서울시 이건기 과장의 ‘건축정책 집행의 현황과 발전방향’, 건축가협회 이광만 부회장의 ‘국가품격을 높이는 건축계의 역할’, 건축학회 박경립 부회장의 ‘건축계의 복합성과 네트워킹’, 대한건축사협회 전영철 이사의 ‘건축계의 제도현황과 제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김인철 위원을 좌장으로 주제발표를 한 패널과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였다.



기회의 한국건축 정책토론회



▣ 소통과 실용의 도시정책토론회 ▣

했던 토론회는 도시·건축분야 기술사 등 도시관련 산·학계 관계자와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 명이 모여 도시정책의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로 서울대 정창무 교수가 ‘야만의 도시에서 야망의 도시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협성대 이재준 교수가 ‘도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그린도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 사장이 ‘삶을 디자인하는 도시계획과 정책의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명철 위원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에서는 고려대 김세용 교수, 중앙대 김찬호 교수,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선권수 부회장, LH 홍기문 녹색경관처장, 국토해양부 유성용 도시정책과장, 서울시 진희선 도시관리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도시분야 정책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지정토론에 이어서 방청석을 대상으로 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 업·단체 간담회

제1기 위원회는 외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 건축단체장 조찬간담회 ▣

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건축 3단체와 2009년 7월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에서는 정명원 위원장과 최명철 운영위원, 김혜정·손세관·김인철 분과위원장, 강성식 부단장 등이 참석했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최영집 회

장과 전영철 이사, 한국건축가협회의 김창수 회장과 이관직 이사, 새건축사협회의 이필훈 회장과 함인선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현황 및 주요 업무 소개, 위원회 발전방향 및 국가 건축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 정책제안 건의, 위원회와 건축 3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장기적으로는 발주제도 개선과 함께 가되, 먼저 설계의 중요성과 저변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발주제도의 개선도 건축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하고, 턱키 위주의 획일주의 타파가 중요하다.
- ② 규제완화를 통해 노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시 CO₂저감·미관향상·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③ 설계·시공·유지관리 효율성을 증대하는 BIM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 설계사무소에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④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위원회는 물론 건축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직이며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한다.
- ⑤ 지구온난화 차원에서 기획중인 ‘투발루(지구온난화로 사라진남태평양의 섬) 프로젝트’에 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 ⑥ 3개 협회의 다양한 매체와 모임을 통해 위원회의 동정과 주요 추진과제를 알리는 등 홍보에 협조해야 한다.
- ⑦ 향후 이러한 모임을 자주 가져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위원회의 정책 및 로드맵을 알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간담회는 위원회와 도시·건축학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축·도시·조경학회 회장단과 2009년 7월 3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의 정명원 위원장, 최명철 운영위원과 김혜정·손세관·김인철 분과위원장, 강성식 부단장 등이 참석했



■ 건축·도시·조경학회 회장단 조찬간담회 ■

고, 대한건축학회의 손장열 회장과 제해성 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이양재 부회장과 이창수 이사,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운영태 회장과 김기호 부회장, 한국조경학회의 조세환 회장과 양홍모 수석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간담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와 유관 학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경쟁력 있는 녹색 건축·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계의 다양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4대강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 뉴하우징 운동 등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도시 문화포럼, 제도개선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는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학교를 공원 또는 커뮤니티 시설과 결합하는 ‘School Park’, 질 좋은 보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보육시설 개선’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감형 건축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도시·조정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해 건축정책의 수립·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건의하였다.

세 번째 간담회는 건설업계와 위원회 간의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건설업·단체와 2009년 8월 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조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에서는 정명원 위원장, 김혜정 정책조정분과위원장, 최명철 운영위원, 양윤재 위원, 강성식 부단장 등이 참석했고, 건설협회의 권홍사 회장과 천태삼 기술지원본부장이 함께하였다.



■ 건설업·단체 조찬간담회 ■

건설사에서는 대림산업의 최수강 부사장, 포스코건설의 임경호 상무, 현대산업개발의 손성호 상무, 롯데건설의 강대권 상무, 한화건설의 이근포 부사장, 한진중공업의 서정범 본부장, 코오롱건설의 김태홍 본부장, 삼환기업의 김재환 상무, 풍림산업의 김철영 상무 등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및 사업과 건축·도시관련 제도개선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에 건설업계는 위원회의 주요정책에 공감하면서 업종·업역 간 융합,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특히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심의절차 간소화, 환경·에너지관련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시행, 중앙집중형 조달방식 개선,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무 규정 완화 등 과감한 규제완화에도 힘써 줄 것을 건의함과 아울러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활성화하여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도시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관련 제도를 먼저 개선하여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네 번째로 위원회는 건축업계 발전방향과 건축행정 제도개선, 건축업계 정책제안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건축 3단체와 2010년 1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신년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에서는 정명원 위원장, 최명철 운영위원, 박민우 부단장 등이 참석했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최영집 회장과 전영철 이사, 한국건축가협회의 김창수 회장, 박재환 이사, 이상림 차기회장, 윤석우 전회장, 새건축사협회의 이필훈 회장과 함인선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단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하였으며, ‘통합은 각 협회 간 컨센서스를 먼저 형성해야 하고, 당장 통합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아울러 ‘「건축기본법」에 친환경 규정이 없어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턴키제도·현상설계 개선, 건축신고 제도의 완화 등 건축계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새로운 어젠다 개발이 필요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의 시행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다.



■ 건축 3단체 신년조찬간담회

3. 워크숍



▣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제1차) ▣

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전략 및 추진과제’,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위원회의 역할’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및 뉴하우징 운동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제2차 워크숍은 민간위원 12명, 기획단 18명, 건도연 3명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6월 26일 강원도 영월 별마로 천문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전략과 추진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함과 아울러, 4대강사업의 ‘천변저류지’와 관련한 청룡포 등의 현장시찰과 동강 일대 수변환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되었다.



▣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제2차) ▣

제1기 위원회는 내부 역량강화와 현안의 심도 있는 토론 등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1차 워크숍은 2009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위원 12명, 기획단 24명, 국토해양부 5명 등 총 41명이 참석하

제3차 워크숍은 2009년 12월 29일 위원장 등 민간위원 11명을 비롯, 손장열 건축학회장, 황희연 국토·도시계획학회장, 조세환 조경학회장, 최영집 건축사협회장, 김창수 건축가협회장, 이필훈 새건축사협의회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 유관단체장 7명과 기획단의 박민우 부단장 등 과장급

이상 7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디자인공간문화과장, 청와대 행정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장 등 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달개비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송년워크숍에서는 기획단의 ‘건축정책위원회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등을 제시한 중앙대 이언구 교수의 ‘저탄소 녹색건축의 정책방향’ 특강과 이에 대한 토의와 함께 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한 자유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4차 워크숍은 위원장, 김인철·류춘수·이진숙·최두남 위원 등 민간위원 5명과 박민우 부단장 등 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구례, 하동, 순천 일원에서 현장시찰을 겸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전략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전통사찰 및 신한옥마을 조성현장 견학’, ‘섬진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 방문’, ‘신한옥 및 생태수변 공간 견학’ 등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위원회 발전방향 모색 송년워크숍(제3차)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제4차)



|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제5차) |

제5차 워크숍은 위원장, 김인철·김혜정·손세관·채선엽 위원 등 민간위원 5명과 유병권 부단장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소재 숲체원에서 기획단의 추계 체육행사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1년 추진과제 중 기획단에서 사전연구 및 조사한 ‘생활중심공간으로서의 공원조성 방안’, ‘범죄방지를 위한 안전도시 조성방안’, ‘지방건축 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있었다.

제 3 장

| 활동성과 |

- 제1절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제2절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 수립
- 제3절 단독주택 에너지효율 및 생활환경 개선
- 제4절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 제5절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 제6절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 제7절 국토환경 디자인정책의 기본원칙 제시
- 제8절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 제9절 기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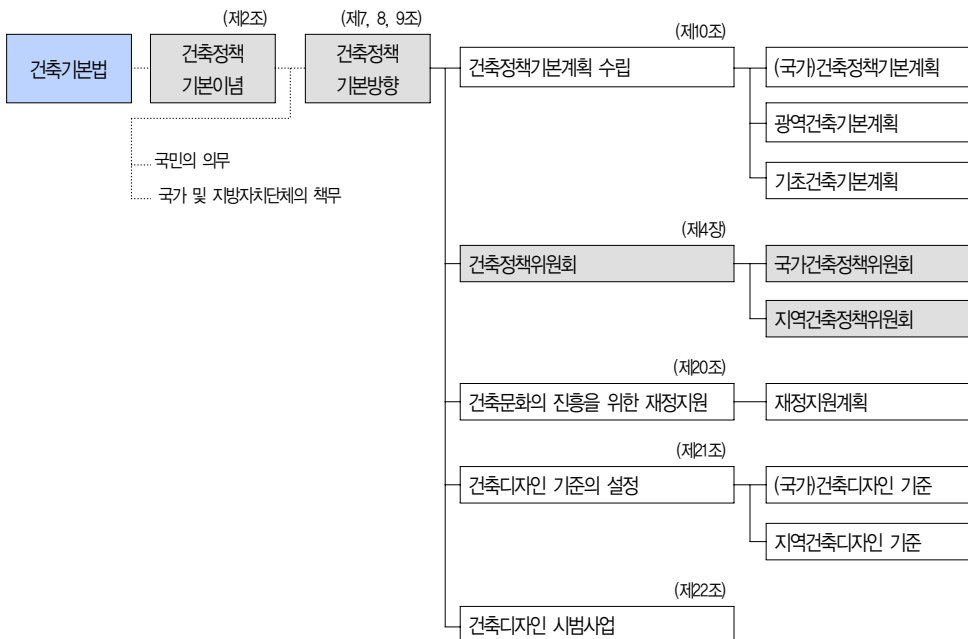
제 1 절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1. 추진배경

가.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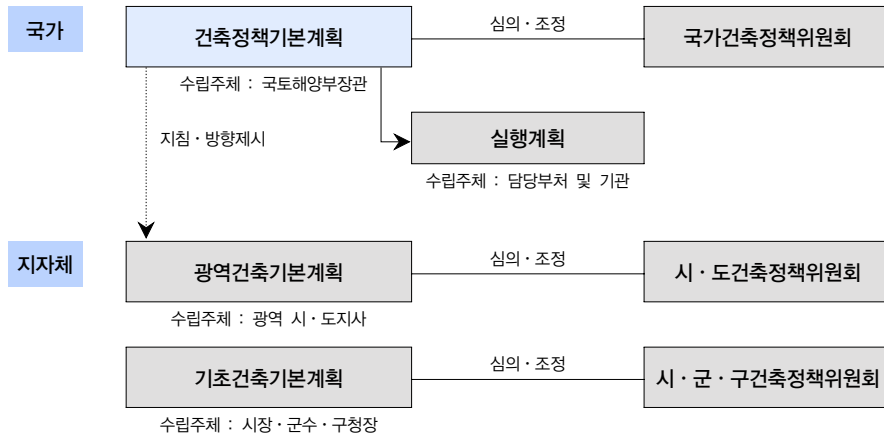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기본이념으로, 그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2008년 6월에 발효됐다. 전체 제5장 제24 조로 구성된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 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건축 관련 최상위 법령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Ⅱ <그림 4>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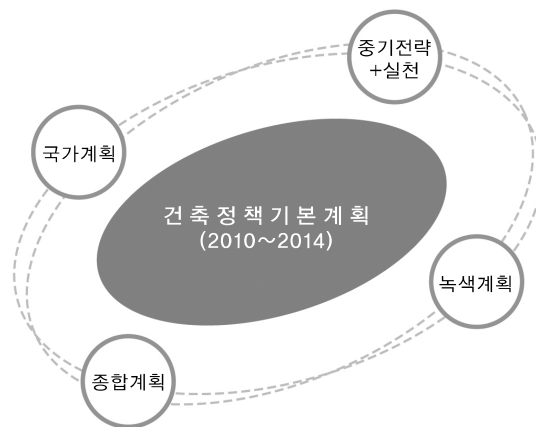
「건축기본법」은 국가 전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에서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의 건축적 특성, 사회·경제·문화적 실정 등을 고려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림 5>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체계 ▣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10년 5월에 수립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5개년 단위 발전전략으로 국토디자인 향상, 건축·도시관련 산업육성, 건축문화진흥, 녹색성장 구현 등 다양한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전략계획이자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다.



▣ <그림 6>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 ▣

계획범위는 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까지 포함하는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내용은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 사항을 포함한다.

〈표 11〉 계획의 내용적 범위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방안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 건축문화 기반구축 • 건축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 한옥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나. 외국의 건축정책 현황

1990년대부터 유럽 각국은 국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1) 네덜란드

1991년 최초로 건축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 관련 인프라 조성(1차), 건축 관련 영역의 확장(2차), 시범프로젝트 선정(3차), 문화정책과의 통합(4차) 등이다.

2) 프랑스

1997년 이후 ‘건축교육개혁’, ‘건축센터 설립’, ‘건축직능 개혁’ 등에 관한 안건을 추진하고, 민관합동 조직인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CAUE)’를 통해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영국

2012년 런던올림픽을 대비하여 건축위원회(CABE)를 중심으로 공공건축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스코틀랜드

건축정책과 디자인기준을 담은 디자인정책을 발표하고, 법령(Planning Act 2006)을 입안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5) 핀란드

시민의 도시환경에 대한 기본권을 천명하고, 선도모델로서의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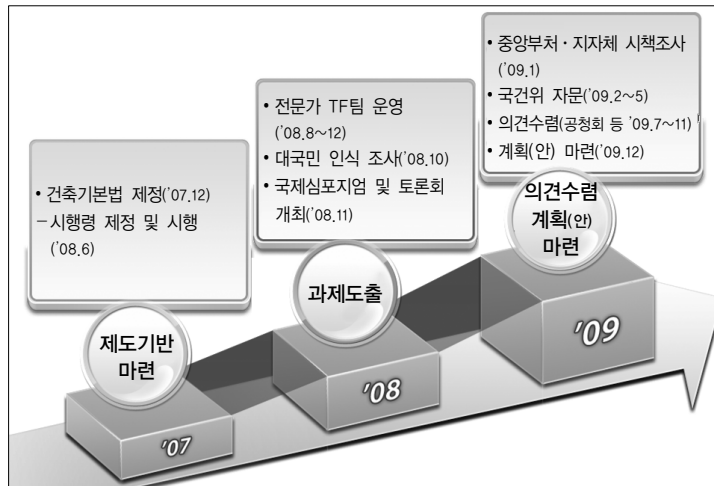
┆〈그림 7〉 유럽의 주요 건축정책 추진 현황 ┆

2. 추진경과

2007년과 2008년은 ‘건축정책기본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과제를 도출한 해였다. 2007년 12월에 『건축기본법』을, 2008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각각 제정·시행하였다.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부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TF를 운영하였고, 같은해 10월 대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국제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은 부처협약과 의견수렴 단계를 거친 해였다. 2009년 1월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관별 시책을 조사하였고,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위원회의 자문이 이루어

졌으며,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2009년 12월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8】 건축정책 기본계획(안) 추진경과

또한 위원회는 합동연석회의와 담당 분과위원회인 정책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전 과정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2009년 2월 12일 건축정책기본계획 초안을 최초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의 구성방식, 용어의 적정성, 현행 도시계획체계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같은해 4월 15일에는 추진주체의 명확화, 단계적 추진방안, 위원회 추진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009년 4월 28일에는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실천과제 간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단기·중기·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같은해 5월 8일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총괄 검토를 통해 구성체계, 3대 정책목표, 8대 추진방향 및 35개 실천과제, 우선추진과제 등을 확정하였다.

2009년 5월 26일에는 국토해양부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받았으며, 같은해 8월 25일 대통령 보고 안건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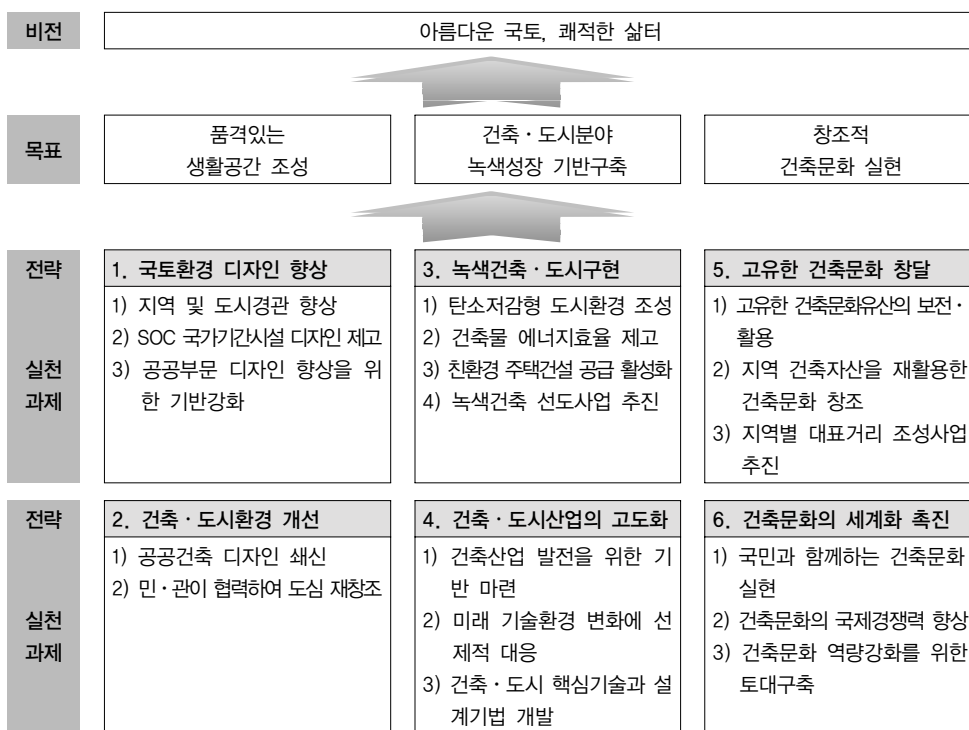
2009년 10월 28일 건축정책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2010년 4월 13일 보고안건을 확정하고 보고준비를 마쳤다. 최종적으로 2010년 5월 3일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년)’을 제3차 대통령 보고회를 통해 보고하였으며, 동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25호

로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3. 주요내용

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의 구현을 위해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의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3대 목표로, 6개 추진전략과 18개 중점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그림 9> 건축정책기본계획 구성체계 ┆

나. 전략별 추진방향

1) 국토환경디자인 향상

- ① 도시 내 국민 체감형 시설의 디자인 개선과 통합된 도시이미지 형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어촌 경관형성, 동서남해안의 해안경관 창출 등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한 국토의 품격향상을 추진한다.

- ② 친환경 철도의 건설과 고속도로 디자인 정비사업, 항만시설의 디자인개선, 명품교량 건설 및 관광자원화 등 주요 SOC 시설별 디자인 향상 전략을 마련한다.
- ③ 공공부문의 디자인업무를 개선하여 통합디자인 실현, 발주방식의 다양화, 관련 법령과 효율적 연계·통합 등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2) 건축·도시 환경 개선

- ①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특화와 환경개선,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개선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
- ② 공공청사,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합리적 설계기준 마련, 학교시설의 디자인 강화,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 등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③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강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지원 종합대책 마련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도심재창조를 추진한다.

3) 녹색 건축·도시 구현

- ①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의 구축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형성을 유도한다.
- ②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확대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추진한다.
- ③ 그린홈 공급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 제고, 주택부문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등 친환경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활성화한다.
- ④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학교의 보급과 탄소제로 건축 시범사업 등 녹색건축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4)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 ① 건축사 등 전문가의 역량강화와 건축 관련 국가R&D의 확대, 신진 우수설계자 육성 등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 ② 내진기준과 방재기준의 강화 등 건축(조경) 관련 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축정보모델링(BIM)의 활성화 등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③ 초고층 건축물 등 첨단 설계기술의 개발과 IT기술과의 융·복합화 등 녹색건축 관련기술 고도화를 통해 건축·도시 관련산업을 창의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 ① 기존 도심의 한옥지구 보전·재생과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한옥의 산업화와 현대화 기술개발,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추진 등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②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의 유희 건축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모델 마련 등 지역의 다양한 건축자산을 건축문화 창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③ 광화문~한강 구간 국가상징거리 조성 and 지역의 대표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한다.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 ① 각종 건축관련 행사의 내실화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도입,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문화 교육확대, 우수한 건축물과 도시에 대한 홍보강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를 실현한다.
- ② 국내의 우수 전문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건축가(조경가) 국제브랜드화 추진과 해외공관을 활용한 한스타일 건축문화 홍보 등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 ③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건축문화 기록물의 축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적 토대를 마련한다.

다. 전략별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실천과제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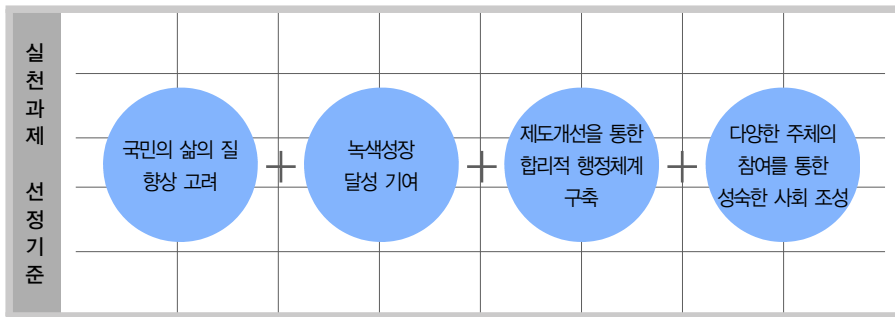
첫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파급효과가 있는 과제로서 도시환

경의 기반인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국정과제로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녹색국토 환경조성에 기여도가 높은 과제로서 녹색산업, 지식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셋째, 국토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법·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

넷째, 다양한 추진주체의 통합적 참여를 통해 정책수단의 합리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기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와 연계·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Ⅰ <그림 10> 실천과제의 선정기준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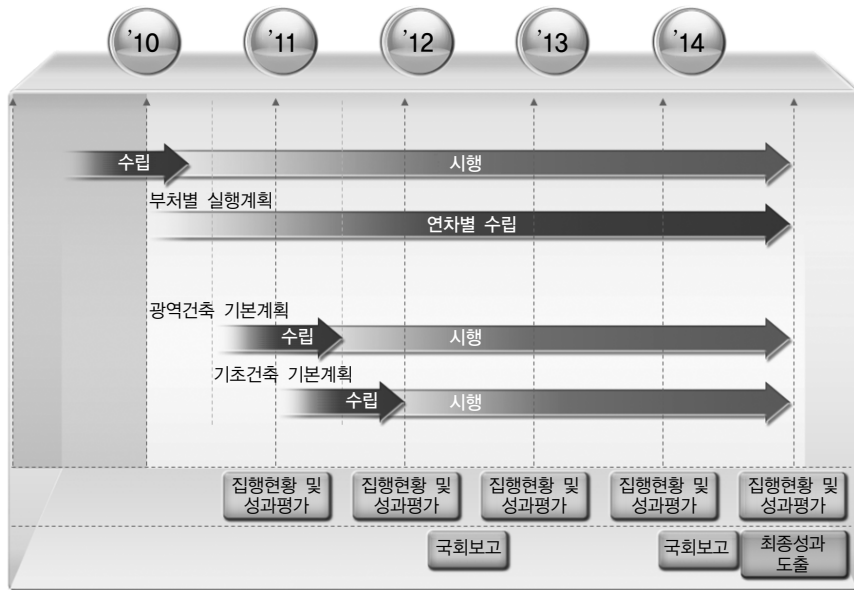
4. 성과 및 의의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건축분야의 발전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유도하여 국가의 품격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과제와 부처별 과제, 지자체 추진과제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성과평가 자료를 마련해 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매 2년마다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해 국회보고를 할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은 현재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나머지 모든 광역시·도에서도 2011년까지는 지역건축위원회 구성 및 예

산 확보 등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림 1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진행계획

제 2 절

국가상징거리 조성방안 수립

1. 추진배경

‘국가상징거리 조성’은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월 4일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에서 밝히고, 8·15 경축사에서 재천명한 ‘국가상징거리 조성 구상’을 토대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한강에 이르는 7km 구간을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표출하는 국가상징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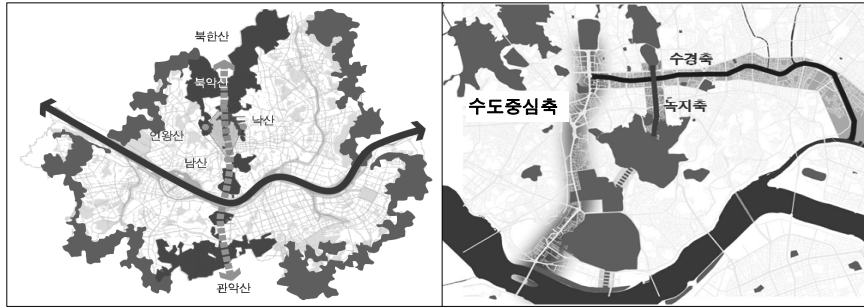
가. 추진의 필요성

‘국가상징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국가적 중심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대 궁궐 등 전통적 도시조직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세계적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수도 서울’의 정체성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의 역사를 성취해 온 ‘국민적 자부심’을 표출할 수 있는 국가 중심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둘째,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녹색·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녹색 도시 구현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이다.

셋째, 국가수도의 도시구조 강화를 위한 수도 중심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한 수경축, 북한산에서 관악산,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녹지축과 더불어 수도 중심축을 조성하여 도시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림 12〉 수도 서울의 도시구조 ┃

나. 해외 사례

1) 프랑스 파리의 ‘그랑 프로젝트(Grand Project)’

그랑 프로젝트는 프랑스대혁명 200주년을 기념한 국가주도 프로젝트로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세계적으로 고양하기 위해 계획됐다. 루브르 궁전에서 샹젤리제 거리를 거쳐 개선문에 이르는 역사의 축을 라데팡스까지 연장하고, 아홉 개의 기념비적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몰(National Mall)’

국회의사당과 링컨 메모리얼을 녹지로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정치·역사·문화 중심지로서 미국을 상징한다.

3) 독일 베를린의 ‘연방정부청사지구’

1990년 독일 통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수도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녹색도시 및 유럽의 중심국가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의 슈프레보겐을 청사 구역으로 설정하고 공공시설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했다.



┃ 파리 그랑 프로젝트 ┃



┃ 워싱턴 내셔널 몰 ┃



┃ 베를린 연방정부청사지구 ┃

2. 추진경과

‘국가상징거리 조성’은 2008년 12월 양윤재 위원을 비롯한 안건혁·이진숙·류춘수·김광현 위원 등을 포함한 민간위원 TF를 구성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동 위원회 TF에서는 대통령 보고자료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국토해양부의 사전기획 연구를 관리하고,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코레일 및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와 기획단 종합회의 등을 통해 국가상징거리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하였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국토해양부가 사전기획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본구상은 국토해양부가 발주하여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위원회는 동년 2월 9일, 2월 16일, 2월 23일, 3월 9일 네 차례에 걸쳐 국가상징거리 기본구상 논의와 문제점 발표, 관련업무 조정논의, 사업진행 방향검토, 계획이슈 및 문화재 관련사항 등을 관련기관 등과 토론·협의 등을 거쳐 사전기획 연구(안)를 마련한 후 2009년 3월 30일 1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양윤재 위원이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또한 제1차 대통령 보고회 이후인 2009년 4월 16일 위원회는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 등 후속조치에 대해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였고, 그 결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종합계획수립용역을 한국도시설계학회에 발주하여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동 용역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2009년 7월 17일~18일 양일간, 위원회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수립 용역진 등과 워크숍을 실시해 연구내용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개최한 바 있고, 동년 8월 17일에는 관련부처 등과 회의 등을 펼쳐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함과 아울러 ‘국가상징거리’ 명칭공모를 시행해 총 3,683건 응모작 중 최우수작으로 ‘한가온거리’를 선정하고 우수작 3편과 장려작 6편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9월 15일에는 국가상징거리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와 국토해양부·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상징거리 심포지엄’을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동년 10월 12일과 20일에는 관련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국가상징거리 교통표지판 개선방안과 세종로공원 조성계획, 정부종합청사 리모델링 방안, 광화문 권역 교통 및 조경계획, 철도 지하화방안 등의 종합계획용역을 검토한 바 있으며, 11월 24일에는 사업일정 및 사업범위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년 12월 11일에는 국가상징거리 2차 워크숍을 개최해 상징거리조성의 타당성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2010년 11월 29일 개최된 제7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그간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광화문에서 승례문까지의 1단계 구간(약 2km)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태평로 보행로 확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성공회성당 앞 문화마당 조성사업 등을 우선 시행키로 하였다.

3. 주요내용

가. 조성 기본방향

‘국가상징거리 조성’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다.

1) 도심부 역사성 구현 및 인간 중심환경 조성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광장조성 등을 통한 보행 중심의 도심환경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2) 품격 높은 가로환경의 구현

가로수·공공시설물 등 가로경관 요소를 통합 디자인해 상징적이고 품격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3) 문화적 활력공간 확충

세계적 수준의 건축·문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존 역사문화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4) 국가 수도의 경제적 동력공간 창출

국가 수도인 서울을 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한강까지 아우르는 신동력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 <그림 13> 국가상징거리 조성방향 ◥

5) 그랜드 링크의 조성

서울역에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인 그랜드 링크(Grand Link ; 보행 녹지축)를 조성해, 보행환경은 물론 주변 낙후지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나. 권역별 조성방향

1) 광화문권역

광화문권역은 ‘국가 역사·문화의 중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성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구현 및 국민 중심공간 조성

먼저 을곡로를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을 경복궁과 직접 연결하여 사람 중심의 역사적 광장으로 확대·조성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건물 앞에 놓이는 넓은 대로로 국가의 중요 행사에 사용했던 경복궁 월대와 동서 십자각을 복원하고, 해태상을 월대 전면인 원위치로 이전하는 것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세종로 정부청사 건물의 저층부를 아트리움·문화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광장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② 국가적 문화·예술공간 조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대한민국관 건립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국립대한민국관’의 경우,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현재 미 대사관 부지를 포함하여 신축하는 방안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 가로공간 및 광장 활성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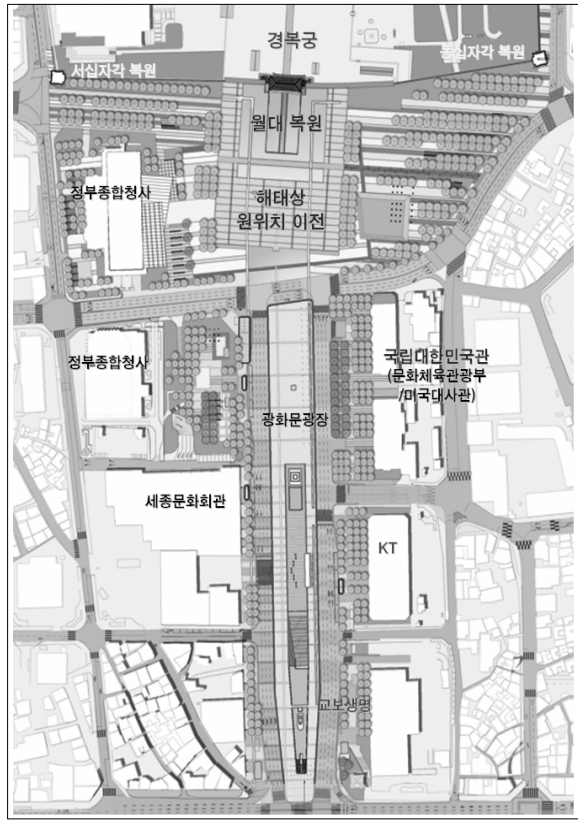
건축물 내 복합문화 기능을 도입하고, 가로대응형 저층부 계획 및 저층부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저층부를 공공에서 임대하는 방안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한 가로변 보도를 확충하고, 가로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한다.



■ 현재 조성현황 ■



■ 단계적 개선(안) ■



■ <그림 14> 광화문권역 조성방향 ■

2) 시청권역

시청권역은 ‘도시·문화의 중심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성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문화 클러스터의 형성

서울시의회 건물 등을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변 문화공간과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성공회성당·서울시의회·덕수궁을 아우르는 문화마당을 조성하고 서울시 신청사 내 덕수궁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청계광장에서 시청광장까지 가로·건물을 통합디자인해 가로공원을 조성한다.

② 근대 한국의 중심공간으로서 덕수궁 일대의 위상 제고

덕수궁·시청광장·환구단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간을 형성한다. 덕수궁 영역을 상징적으로 복원하고 담장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며, 시청광장으로서 시각적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한 대한제국의 중심공간인 환구단 및 시청광장에 대응해 덕수궁 전면광장을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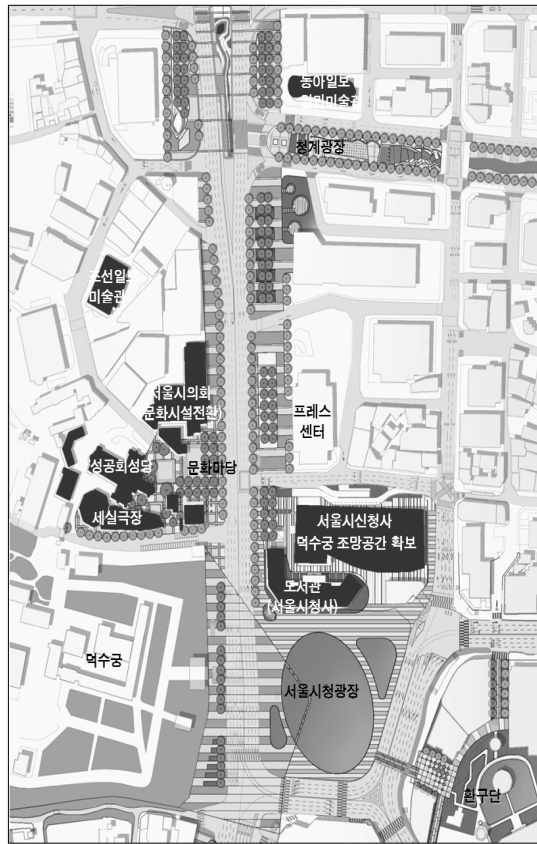
| 성공회성당(1926) |



| 서울시의회(1935) |



| 덕수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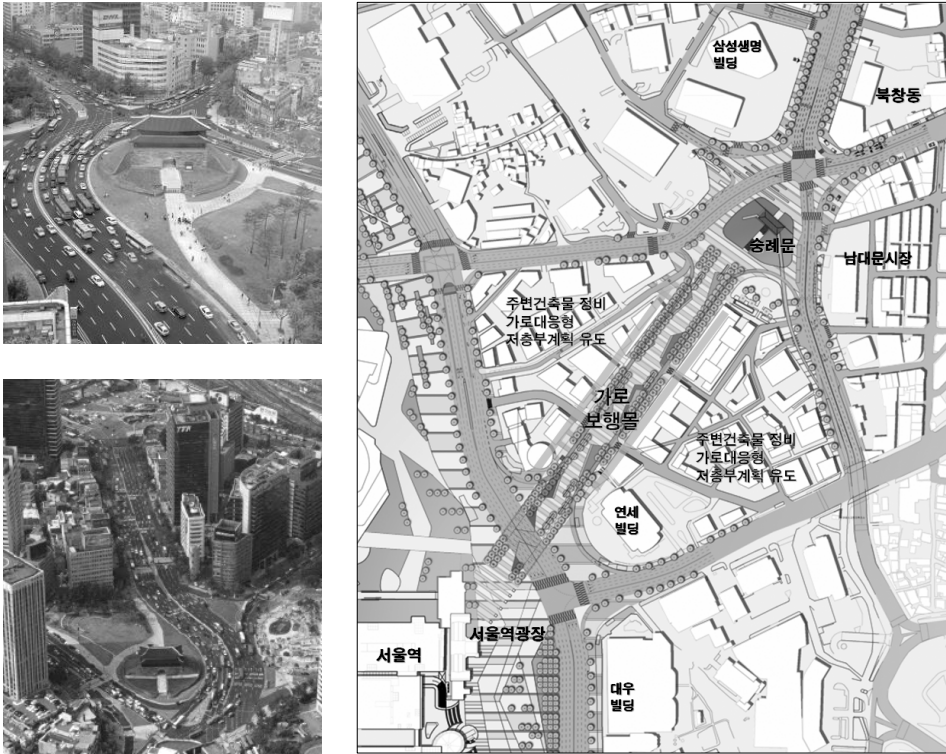
| <그림 15> 시청권역 조성방향 |

3) 서울역권역

서울역권역은 ‘국가수도의 관문·교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 구체적인 조성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심 진입 관문의 이미지 강화

서울역 부근은 차량 중심의 도로를 보행 중심 광장으로 전환하고, 강한 방향성의 식재를 통해 도심 진입부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변 건축물을 정비하여 공간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 승례문 주변도로 현황 ▣

▣ <그림 16> 서울역권역 조성방향 ▣

② 도심과 한강을 연결한 녹지축의 중심광장 조성

도심으로부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중심공간으로서의 서울역광장의 위상을 높인다. 더불어 서울역 광장정비, 공원 및 문화공간 조성, 국제회의장 건설 등을 통해 이 부근을 국가 중심 교류공간으로 정비한다. 현재 ‘서울역 북부 국제회의단지 조성사업’과 ‘구 서울역사 문화공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③ 국가 수도의 관문경관 개선

국제회의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 이전, 고가도로 철거 등을 통해 국가 수도의 진입 경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식재를 통한 주변 건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완화한다.

4) 용산권역

용산권역은 ‘미래 신성장동력공간’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조성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거점 문화시설 조성 및 미래 활력공간 네트워크화

한강로를 중심으로 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노들섬 등에 다수의 거점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한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과 같은 전문·특화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공간을 구축한다.

② 보행녹지축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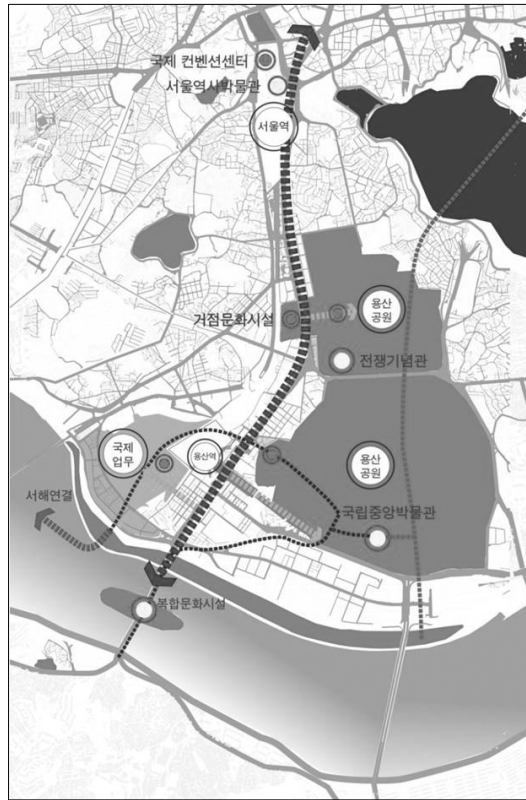
도심과 한강을 연결하는 그랜드 링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녹지축을 중심으로 용산공원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이 부근을 국가의 신성장공간으로 재창조한다.



| 용산 국제업무지구 |



| 예술섬(노들섬) 당산안 |



| <그림 17> 용산권역 조성방향 |

4. 성과 및 의의

국가상징거리의 4개 권역의 테마는 역사공간으로서 광화문권역, 문화공간으로서 시청권역, 삶의 공간으로서 서울역권역, 미래 신성장 동력의 공간으로서 용산권역이다. 이는 네 개 권역 거리를 조성해 전통문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을 창출하려는 의도다.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 중심의 성장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전 세계 도시들의 치열한 문화경쟁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문화의 중심축이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로 옮겨지면서, 아시아 각국 도시들의 문화경쟁은 이미 뜨겁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최첨단 건물의 위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일본 외곽의 해안도시쯤으로 여겼던 요코하마(横浜)는 지난 30여 년 동안 문화도시 발전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문화관련 경제효과를 올리는 동시에 일본은 물론 해외 예술가들이 살면서 일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났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통해 드러난 한국인의 열정과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서울을 21세기 세계 문화 중심지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서울만의 개성 있는 문화발전 전략을 세워 ‘국가상징거리’ 계획을 수행한다면 서울은 세계도시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랑스럽고 멋진 국가 대표거리가 될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세계로 표출



국민의 자부심에
부응하는 높은 품격



녹색 도시환경을
선도적으로 구현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활력을 창출

■ 세계 일류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양 ■

■ 세계 속의 일류국가 이미지 강화 ■

제 3 절

단독주택 에너지효율 및 생활환경 개선

1. 추진배경

우리의 주거문화는 지난 5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주거수준 역시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의 양적 확대와 개발의 효율성 추구로 인해 주거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해소됐으나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환경을 초래했다. 내용적으로도 기존 커뮤니티 와해, 소득계층 간 위화감 심화 등이 제기되는 등 거주민의 일상생활을 담는 만족할 만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최근 대도시뿐 아니라 점차 시골까지 확산되고 있는 우리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내·외부의 비판과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주거환경의 본질적인 개념과 목표를 더욱 뚜렷하게 확립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위원회는 출범 이후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를 주거문화 개혁에 두고 ‘뉴하우징 운동(New Housing Movemen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하우징 운동은 다양한 주거 수요, 커뮤니티 회복, 에너지 저감 등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물리적 대상만이 아닌 공간·문화·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양방향 운동이다. 뉴하우징 운동의 중점 추진과제는 해피하우스, 디자인 보금자리, 뉴타운 2.0 등이고, 현재 관련 부처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

해피하우스 정책은 아파트 위주의 대규모 개발과 정비방식에서 탈피하고,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보존하는 친서민 생활공감 정책이다. 현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거 편의성 부족, 개별 유지관리 부담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그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도 신재생에너지 및 신축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기존 주택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배경으로 추진된 해피하우스 정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편리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관리비

용 절감, 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2. 추진경과

위원회는 2009년 3월 30일 제1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뉴하우징 운동’의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해피하우스’를 보고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위원회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자체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한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5월~9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30일 시범지역을 공모·선정했다. 2010년 1월에는 공공기관경영연구원이 해피하우스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를 완료했고, 2010년 2월 10일 제1차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센터를 개소하면서 ‘2010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주 덕진 지역은 2010년 2월 2일에, 대구 서구 지역은 2010년 2월 24일에, 서울 마포 지역은 2010년 3월 11일에 각각 해피하우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전주시는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해피하우스 사업에 지역 대학 등을 참여시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0년 4월 12일 센터에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했고, 2010년 7월 9일에는 서비스 지원범위 및 사업지역을 확대했다. 2010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2차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해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0년 12월 중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 해피하우스 개소식
전주 인후(‘10.2.2) ■



■ 대구 서구(‘10.2.24) ■



■ 서울 마포(‘10.3.11) ■

3.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공모 및 추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지평가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지 평가기준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특성과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계층특성, 지자체장의 의지 등 세부 항목을 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1차 서면평가는 사업대상지 내 단독주택 비율, 거주자 유형, 단체장 의지, 광역지자체 지원, 주민 참여도, 기존사업과 연계 가능성 및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2차 현지평가는 현지실사를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시범사업 후보지의 적합도, 담당직원의 사업 이해도 및 적극성,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모 결과 12개 지자체에서 응모해 1차 서류평가에서는 2배수인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2차 현지평가에서는 심사단의 현장방문과 PT, 질의응답을 통해 대상지의 잠재력과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적으로 1차, 2차 평가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주시 인후2동, 서울 성산1동, 대구 평리3동 3개 지구를 선정했다. 대상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이 지역은 2,900여 동으로, 단독주택(72%)과 자가 거주(86%)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 406세대(823명)가 거주하고 있다. 해피하우스 센터는 사업구역 내 주민센터에 설치됐다. 시범사업 대상은 해당 지역 총 5,659세대 중 백제로 부근 880여 세대이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1동

이 지역은 3,700여 동으로 단독·다가구가 밀집(90%)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171세대(272명)가 거주하고 있다. 해피하우스 센터는 사업구역 내 위치한 구 마포구청사 5층 빈 공간을 활용해 설치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해당 지역 총 6,375세대 중 서남부지역 1,100여 세대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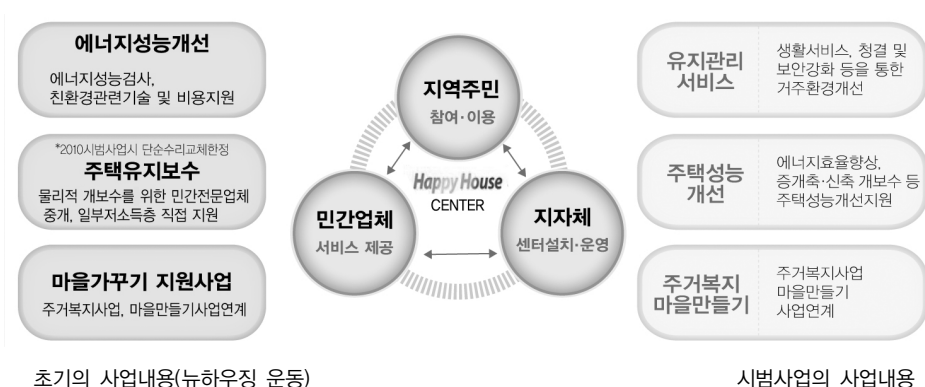
이 지역은 290여 동으로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며(90%), 세입자 비중이 높고 (60%), 기초생활수급자 83세대(147명)가 거주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구역 내 사무실을 대여해 설치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해당 지역 총 6,264세대 중 미산공 원 일대의 800여 세대이다.

나. 시범사업 사업내용 및 성과

‘해피하우스’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택에너지 효율개선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별로 주거복지와 마을가꾸기 사업을 연계해 운영했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에너지 효율서비스는 단독주택의 낮은 단열수준과 창호성능을 고려하여 적외선 화상시스템 등을 활용한 주택의 에너지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열보강, 창호개선 등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 패트롤제를 운영했다.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으로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지원사업, 한전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과 연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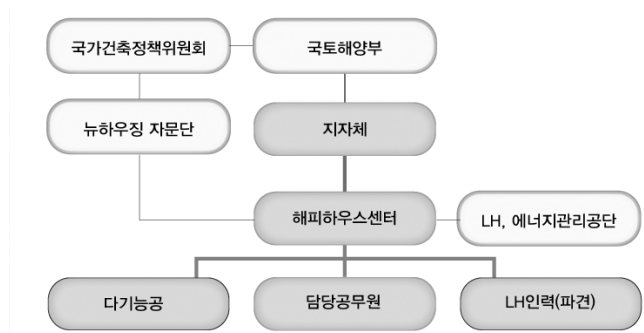
둘째, 주택유지관리서비스는 누수, 누전 등 긴급서비스를 포함하여 간단한 수리 업무, 개보수, 유지관리 서비스 정보제공 등을 지원했다. 방수·단열 등 큰 비용이 수반되는 개보수 작업은 컨설팅을 통해 지역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연결하고 지역업체가 주민과 직접 계약을 통한 작업수행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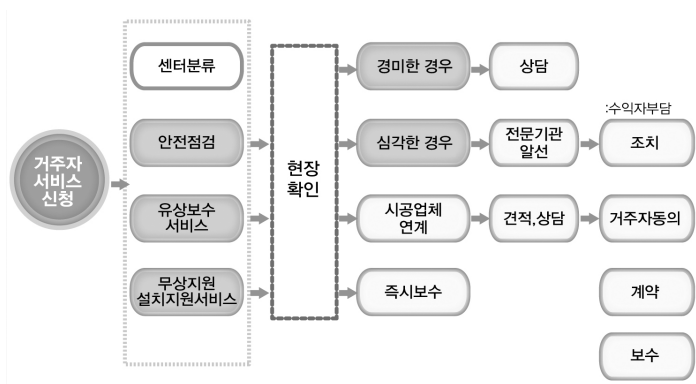
〈그림 18〉 해피하우스 사업의 개념

셋째, 주거복지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연계는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운동을 비롯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폐·공가 철거사업 등을 연계했다.

해피하우스 사업의 총괄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다. 전주센터의 경우, 희망근로자와 일부 자원봉사자를 서비스 지원인력으로 활용했다. 해피하우스 센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사업자등록에 관한 심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했다. 해피하우스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신청하고 접수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지원방안을 결정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파견한 다기능 기술자가 서비스신청 대상 주택을 방문하여 기술을 제공하고, 주택 유지보수 관련 상담서비스도 병행했다.



【<그림 19> 2010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사업추진 조직】



【<그림 20> 해피하우스 서비스 전달체계】

센터 개소 이후 주민 홍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했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부터는 사업대상 지역과 무상지원 대상을 일반가구까지 확대 적용했다. 사업대상 지역은 해당 동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과 재료비 10만원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전주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여 일반가구까지 무상지원을 확대했다. 무상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항목도 추가해 주택상대·지역여건·예산 등을 감안하여 해당센터에서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2010년 10월에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구매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항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해 시범 운용했다. 각 센터별 시범사업의 서비스 추진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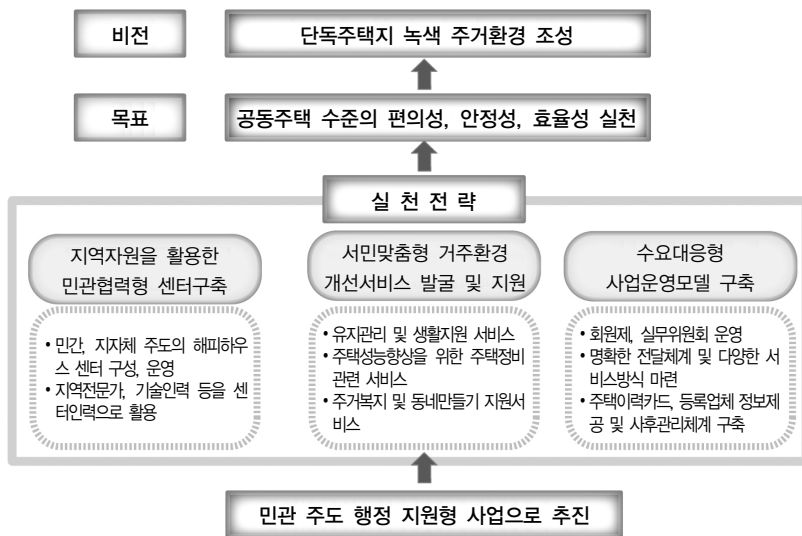
【표 12】 서비스 항목별 추진실적(건수)】

서비스 항목		성산1동	평리3동	인후2동	계
유지보수 서비스	긴급보수(지붕, 옥상 등 누수)	0	48	3	51
	간단한 수리지원(부속품 교체)	430	329	721	1,480
	주택 개·보수 컨설팅(사업자 연계)	23	39	73	135
	주택 안전점검	0	19	0	19
	기타 위생설비 시설보수	48	51	129	228
	유지보수 기술 상담	649	619	868	2,136
	소 계	1,151	1,108	1,796	4,049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5	3	5	13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센터)	0	63	315	378
	” (한전)	71	17	80	168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0	0	0	0
	소 계	76	83	400	559
주거복지	주거복지 상담 및 지자체 연계사업 등	0	0	598	598
합 계		1,226	1,188	2,792	5,206

다.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 방안

단독주택지의 종합적인 주거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행정주도의 사업추진과 간단한 수리지원 서비스에 국한되어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해피하우스 센터의 설립 및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예산 확보·지원 또한 미흡했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단독주택의 성능을 개선해 거주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아파트단지에 비해 낮은 성능수준인 단독주택에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을 확보해 종합적인 주거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것은 공공주도 사업에서 민간주도 및 행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지역 차원의 자생적 동네만들기 사업으로 정착·확대되고, 거주자와 지역에 근거를 둔 자생적인 민간조직, 주택관련 서비스 업체가 상호 소통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독주택 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림 21】 해피하우스 사업의 비전 및 목표

4. 성과 및 의의

‘해피하우스’ 사업은 주택의 관리서비스 질 향상과 에너지 성능향상,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을 살기 좋고, 살기 편한 거주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잠재적 가치인 장소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해피하우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해 자발적인 주거지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해피하우스 사업은 센터를 중심으로 주택의 물리적 성능개선뿐 아니라 건강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동네만들기를 실현하는 녹색커뮤니티 운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피하우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제 4 절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1. 추진배경

우리의 공공주택은 그동안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주거문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 저소득층이 사는 공공주택일수록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곳보다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주택정책의 중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철학적 이념이 그 안에 자리잡지 못했다. 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수준 높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데 매진했고, 당시 저명한 건축가들을 공공주택 계획에 대거 참여시켜 한 국가의 주거문화를 선도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으로서 2018년까지 총 1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을 단기간에 대량 공급함에 따라 향후 우리 주거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위원회는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를 주거문화 개혁에 두고 지속 가능한 신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뉴하우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금자리주택의 품격향상’이다.

이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이 단순히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저렴하게·많이’ 공급하는 것과 함께 내용적 측면에서도 이전의 공공주택과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제 민간의 시도가 어려운 새로운 주거문화 패러다임을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부문의 개선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였다.

2. 추진경과

위원회는 2009년 3월 30일 제1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 실천과제의 하나로 ‘디자인 보금자리’를 보고했다. ‘디자인 보금자리’는 그동안 임대 아파트의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획일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의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서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후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차별화뿐 아니라 ‘생활을 디자인하다’라는 목표로 보금자리주택의 내용적 차별화·내실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가 국토해양부와 LH공사와 함께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3월 30일 제1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뉴하우징 운동’의 일환으로 ‘디자인 보금자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디자인 보금자리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9년 10월 14일 LH에 대통령 보고내용을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2009년 10월 23일 LH TF팀의 키포미팅을 가졌고, 2009년 11월 27일 ‘새로운 삶과 디자인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했다.

2010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생활맞춤형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2010년 3월 30일 공공주택의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를 완료하였다.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2010년 5월 3일 제3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이러한 성과를 포함한 ‘보금자리주택의 품격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3월 12일 디자인 시범단지 제안서를 국제공모했고 2010년 4월 5일 디자인 시범단지 본 국제공모를 진행해 2010년 5월 28일 디자인 시범단지 국제공모작을 선정했다. 2010년 6월 17일에는 생활맞춤형, 블록형 주택 시범단지 제안서를 공모했고, 2010년 7월 8일에는 생활맞춤형, 블록형 주택 시범단지 제안서 본 공모가 이뤄졌다.

3. 주요내용

가. 목표와 전략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 향상’이라는 비전과 ‘보금자리주택의 품격과 실용성 제고’를 목표로 ‘품격 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나. 전략별 실천방안

1) 전략 1. 품격 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

‘품격 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는 공공주택 디자인이 획일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① 새로운 디자인 및 다양한 주거모델의 모색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고,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서울 강남 3개 임대단지 2,900세대에 국내외 저명 건축가를 지명하는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또한 2011년 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명품 디자인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장애인·고령자 돌봄, 육아지원 등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응하는 생활맞춤형 주거모델은 시흥은계와 부천옥길 지구의 임대단지에 구현할 예정이다. 그리고 2차 보금자리 지구부터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계획을 위해 내력(耐力) 벽체를 없애고 기둥을 도입한 구조형식을 적용한다.



■ 보금자리 디자인 테마 적용 사례 ■

■ 디자인 명품단지(강남세곡 국제공모 당선작) ■

② 경관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밀도·층수의 다양화

밀도와 층수를 다양화하기 위해 평균 18층 이하 층수제한 규제를 최근 폐지했고, 단지별로는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는 단지외곽을 건물로 둘러싸는 블록형에 고층 타워형을 혼합하여 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도시의 가로망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블록형단지 시범사업으로 부천 옥길지구 1개 단지를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상공모를 통해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③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제도정비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외관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발코니가 일정범위 내에서 돌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간거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블록형 단지 현상공모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제도개선

2) 전략 2.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위해 참여형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하고, 지구 내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생활가로변에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집적시키는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① 단지 내 참여형 커뮤니티시설의 조성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위해 방과후 학습공간, 문화교실, 목공방, 유기농 텃밭 등 주민이 참여하며 생산적인 활동으로 함께 가꾸어가는 참여형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② 지역단위 복합 커뮤니티시설의 조성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지역 단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 내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생활가로변에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집적시키는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단지별로 설치하던 관리사무소 등도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단지 내 참여형 커뮤니티시설의 조성예시

■ 지역단위 복합 커뮤니티시설의 조성 예시

③ 커뮤니티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러한 커뮤니티시설을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센터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여 단지 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아나 간병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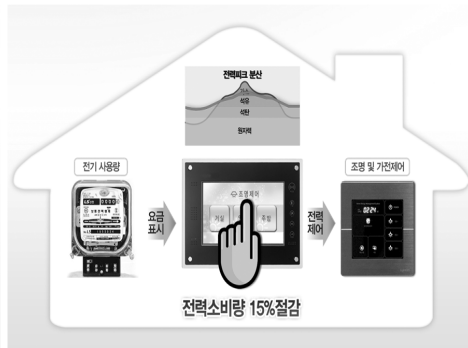
■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개념도

3) 전략 3.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생태기반의 지속 가능한 녹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① 실용적인 그린홈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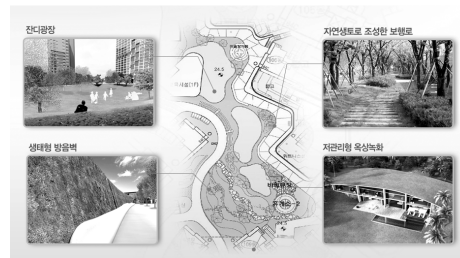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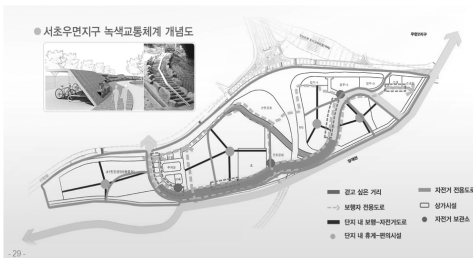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단열강화나 창호면적 축소, 대기전력 차단 등 기본에 충실한 그린홈으로 건설하여 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호폭 30cm 축소 및 발코니 턱 높이 10~40cm를 상향시키고, 단열재의 성능과 두께를 높이며, 단열성이 우수한 이중창호를 사용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인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실시간 요금제와 연계하여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홈 스마트그리드, 자동감지센서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능형 LED 주차장 등 첨단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 <그림 22>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 그린홈 건설 ┃ ┃ <그림 23> 적용 검토 중인 홈 스마트그리드 ┃

② 생태기반의 지속 가능한 녹색공간 조성

친환경 단지계획으로 마을 숲과 바람 길을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중교통망과 네트워크화하는 등 생태기반의 지속 가능한 녹색공간도 조성한다.



┃ <그림 24> 녹색교통 활성화 예시 ┃

┃ <그림 25> 생태형 외부공간 디자인 예시 ┃

4. 성과 및 의의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에 따라 현재 디자인 명품단지(서울세곡), 생활맞춤형 및 新주거모델(시흥은계·부천옥길), 스마트그리드(서울서초)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했다.

이러한 성과를 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제도를 개선해 민간부문까지 확산한다면 과거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21세기 새로운 주택모델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고 주거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 5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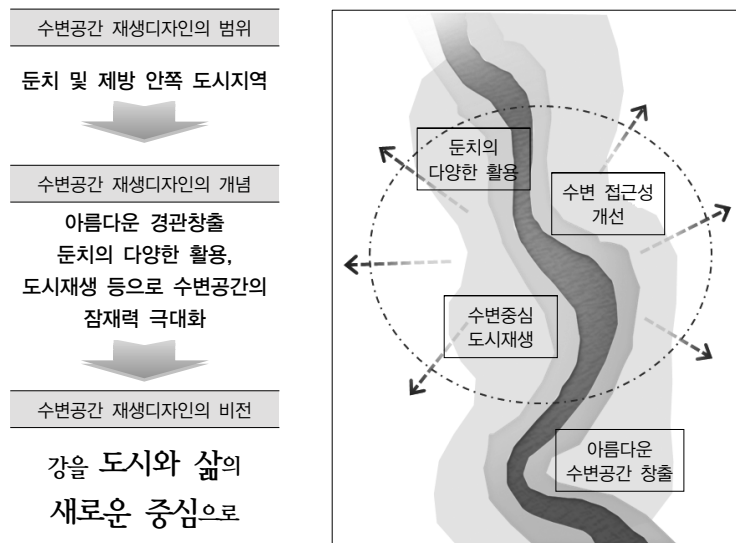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1. 추진배경

가.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의 필요성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하천정비를 도시정비와 연계하여 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변지역으로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수변공간 재생디자인’은 도시와 하천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정립하고, 강과 주변지역을 도시·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그림 26〉 수변공간 디자인의 개념도

4대강 살리기는 기본적으로 강을 되살리는 재생사업이며 이와 연계된 ‘수변공간 재생’은 둔치와 수변인접 도시공간을 되살리는 것이다. ‘수변공간 재생디

자인’은 ‘아름다운 수변경관 창출’, ‘둔치의 다양한 활용’, ‘수변 도시재생’ 등을 통해 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을 말하며, 그 범위는 둔치와 제방 안쪽 도시지역까지 포함한다.

나. 우리 수변공간의 문제점

우리의 수변공간은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제방 및 강변도로로 인해 도심으로부터 강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수변이 도시의 변두리로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하천정비와 도시계획 간 연계가 미흡해 산책로·체육공원 등 단순한 용도로만 활용될 뿐 수변공간의 기능적·공간적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 교외지역의 친수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음식점·숙박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수변경관 공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도시지역 내 이미 개발된 친수지역에는 단조롭고 폐쇄적인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주변시설과 무관하게
이용이 단순한 둔치

▮ 단순한 둔치활용 ▮

건너가기 어려운
하천변 6차선 도로

▮ 도로로 인한 단절 ▮

하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성시까지

▮ 시가지와 이격된 수변공간 ▮

이러한 수변공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변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의 기능성을 제고하며, 우수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재생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수·치수·생태의
안정성 확보

주민 및 도시활동의
기능성 제고

도시공간과 건축물의
아름다움 구현

▮ <그림 27> 수변공간 재생디자인의 3대 기본원칙 ▮

다. 해외 수변공간 활용사례

유럽 등 선진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수변공간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1) 프랑스 리옹시의 론 강변 활용

프랑스 리옹시는 지난 2007년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론강 둔치 6km를 8개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처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특히 손강·론강의 합류점인 콩플루언스 지역을 업무·주거·레저가 복합된 신도심으로 재개발하여 도시활성화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2만 명의 거주인구를 확보하고 2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2) 독일 뒤셀도르프시의 라인 강변 활용

독일 뒤셀도르프시는 1974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라인 강변의 메디안하펜 지역을 다채로운 건축물이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국제적 미디어 도시로 재생시킨 바 있다.

뒤셀로르프시는 강과 도심을 단절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프롬나드로 조성, 공연장·노천카페·스키장 등으로 다목적 활용했다. 이에 따라 709개의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8,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리옹시 론강 버즈드론 및 뒤셀도르프 메디안하펜

2. 추진경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9년 2월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개선방향을 검토해 동년 3월 30일 대통령 제1차 보고회의 주요 안건으로 ‘수변공간 디자인 추진방안’을 상정했다. 2009년 4월에는 3개 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를 개최했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구상’을 보고했다.

보고회 이후 수변공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의 설정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수변도시 비전공모를 실시하고, 더불어 동년 10월에는 수변도시 비전공모 관련 초청강연 및 토론회(도시, 강에서 미래를 찾다), 녹색 국토 조성을 위한 수변공간 디자인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수변공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 11월에는 수변도시 비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2010년 1월 제2차 합동 연석회의에서 수상작 선정을 확정하여 현재 수변공간 디자인 개선방안을 강 중심 국토 재창조를 위한 친수지역 활용방안으로 안건을 발전시켰다.

3. 주요내용

가. 수변공간 재생디자인의 목표 및 전략



【그림 28】 수변공간 재생디자인의 목표 및 전략

나. '수변 접근성 개선' 목표에 따른 전략

1) 도로·제방 등으로 인한 공간단절 극복

- ① 강이 도시를 통과하는 경우, 제방 위 도로신설을 지양한다. 기존 제방 위 도로는 교통계획과 연계하여 녹도화하거나 차선 수를 축소하고, 지하차로·우회로를 설치한다.
- ② 도시와 수변공간을 연결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통로를 확보하여 지하도·보행육교 등을 설치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완경사·계단형 등의 제방을 조성한다.

2) 강과 도심 간의 연결성 강화

- ① 도심과 수변을 잇는 보행녹도(Green-Way)와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② 도심과 수변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수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지류 자전거길을 강 본류 자전거길과 연결한다.
- ③ 자가용 이용수요를 줄이기 위해 수변연결 대중교통망을 확대한다.



지하차로 설치
(뒤셀도르프, 독일)



보행육교 설치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미국)



수변-도심 간 녹지 네트워크 구축
(뒤셀도르프, 독일)

❑ 디자인 예시 ❑

다. '수변중심 도시재생' 목표에 따른 전략

1) 수변을 거주와 경제활동 공간으로 활용

① 수변을 일상 도시생활공간으로 개발

수변을 단순한 레크리에이션 기능이 아닌 일상 도시생활공간으로 개발하여 활용한다. 수변공간의 쾌적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적극 활용해 수변에 양질의 거주·업무·여가공간을 조성한다.

② 수변을 도시 및 지역발전 거점으로 개발

향후 도시발전에 필요한 선도 기능을 수변에 적극 유치하여 수변을 도시 및 지역발전 거점으로 개발한다. 중소도시의 구도심 재생을 수변개발과 연계해 추진한다.

2) 수변 랜드마크 조성

- ①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성·장소성을 반영한 수변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 ② 공공청사·박물관·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수변에 배치하여 수변 공공성의 증대를 도모한다.
- ③ 수변 랜드마크 및 문화시설을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하여 ‘수변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한다.



수변 거주·업무·문화공간 조성
(하펜시티, 독일)



수변 도시재생
(리옹 콤플뤼앙스, 프랑스)



수변 랜드마크 조성
(레이노하펜 크레인하우스, 독일)

❑ 디자인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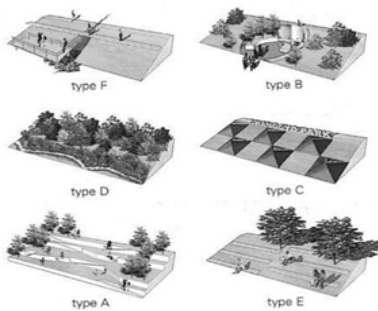
라. ‘둔치활용 다양화’ 목표에 따른 전략

1) 활력 있는 도심지역 둔치 조성

- ① 침수정도와 제방 인접도시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둔치에 다양한 활동을 도입하고, 이수·치수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제방형태를 다양화한다.
- ② 친수성 제고를 위해 수중보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하고, 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호안을 완경사로 조성한다.
- ③ 강에 인접해서 산책로·자전거길의 순으로 배치하되, 둔치 폭이 넓은 경우 산책로와 자전거길 사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2) 자연친화적인 교외지역 수변공간 조성

- ① 강 주변의 녹지와 숲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한다.
- ②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시설, 산책로·자전거길, 기초적 운동시설, 파고라·벤치 등의 휴식시설을 조성한다.
- ③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한다.



다양한 제방디자인 계획안



산책로·자전거길 수변인접 배치(리옹 론강, 프랑스)



자연형 수변공간 조성(하이델베르크, 독일)

▣ 디자인 예시 ▣

마.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 목표에 따른 전략

1) 수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시설물 디자인

- ① 개방감과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점진적인 높이변화 유도 등을 통해 수변 공간과 건축물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 ②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상설계 도입 등을 통해 수변에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한다.

- ③ 차폐식재, 건축물 녹화, 외관개선 등 수변 SOC시설의 디자인을 강화하고,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2) 수변공간의 통합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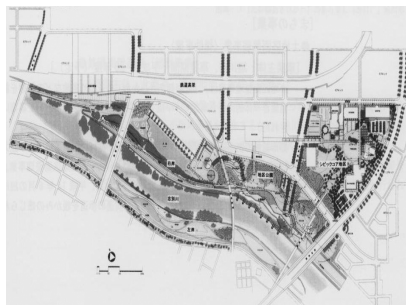
- ① 강과 주변지역의 지형조건, 경관, 역사·문화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디자인한다.
- ② 호안·둔치·제방·가로시설물 등을 개별적·평면적이 아닌 통합적·입체적으로 디자인한다.
- ③ 둔치와 제방 내 도시공간의 통합적인 개발을 위해 하천 정비계획과 도시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수변공간과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뒤셀도르프, 독일)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조성 (하펜시티, 독일)



둔치와 도시공원의 통합정비 (아사히가와시, 일본)

디자인 예시

4. 성과 및 의의

각종 규제에 발생한 난개발과 단조롭고 폐쇄적인 경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강 주변의 친수지역을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으로 재생하여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라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친수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토종합계획상에서의 친수지역 활용방향 반영, 친수지역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 지침개정, 친수지역의 계획적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 개방적이고 매력 있는 친수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친수지역 경관관리 기준마련 등 제도적 개선조치 등을 구상하고 있다.

제 6 절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유형이었던 한옥은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멸실됐다. 하지만 최근 설비 현대화로 품격 있는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친환경 웰빙주택으로서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옥은 한복(衣)·한식(食)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이를 우수한 도시·문화 자산으로 잘 활용한다면 국가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대안적 주거유형으로 한옥을 활성화한다면 목재 가공산업 등 관련 녹색 산업분야가 크게 육성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부처 및 지자체별로 산재해 있는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관련정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한 신한옥 플랜의 기본방향은 국가 품격향상과 녹색성장 선도를 위해 값싸고 편리한 한옥을 개발·보급하고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저렴한 한옥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우리 고유의 정서가 사라진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2. 추진경과

위원회는 ‘신한옥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연구자료와 관계부처 정책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7월 24일 ‘한옥건축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어 위원회는 동년 8월 6일 ‘한옥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한옥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2009년 8월 19일 국가건축정책기획단은 한옥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의 필요성, 한옥기술개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제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동년 9월 30일 신한옥 심포지엄을 열어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참가자와 논의했다.

2009년 11월 19일에는 한옥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담당관과 ‘한옥 육성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회의 및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2009년 11월 10일, 13일, 20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한옥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10년 1월 13일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해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옥의 범주구분 및 지원책 등 보고서 내용의 보완사항을 토의했다. 이후 부처협의를 거쳐 보고안을 완성했다.

2010년 5월 3일 열린 제3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범부처 차원의 한옥 관련 종합추진계획으로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을 보고하였다.

3. 주요내용

가. 목표와 전략

신한옥 플랜의 비전은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다. 이에 따른 목표를 ‘한옥을 대중화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국가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한다’로 정하고, 그 전략으로 ‘한옥의 보급·확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 네 가지를 정립했다.

나. 전략별 실천방안

1) 전략 1. 한옥의 보급·확산

‘한옥의 보급·확산’을 농어촌지역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옥 신축 시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며,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 도서를 개발·보급한다. 이는 농어촌에 한옥을 보급·확산해 1960~70년대 집중 조성된 새마을 주택으로 인해 훼손된 농촌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 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지 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경관을 향상하고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인 한옥 신축이 아닌 마을 단위의 집합적 한옥조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서창향토문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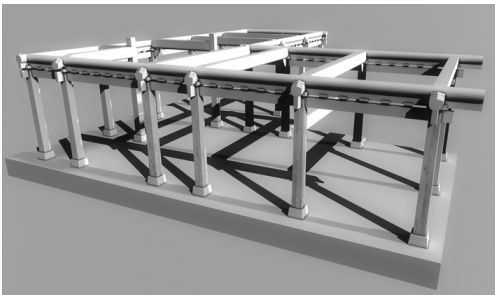


북촌한옥마을

2) 전략 2.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급·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좁고·불편하며·비싼 한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것은 살기 좋고 저렴한 신한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이다. 한옥의 주거성능을 높이기 위해 설계·성능·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R&D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현재에 비해 건축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하고자 한다.

또한 한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자생력 확보가 가능한 시장규모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목재의 표준화 및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설계·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전문업체의 DB 구축·제공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한옥을 대중화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는 등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설계·성능·시공기술개발



목재의 표준화 및 산업화

3) 전략 3. 한옥의 보전·관리

전통한옥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문화자산으로 가꾸려는 전략이다.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며, 양호한 한옥을 공익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한옥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개·보수가 필요한 한옥에 대해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며, 지붕이나 서까래 교체 등 주기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한옥의 개·보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옥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옥 밀집지역에 대한 각종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가회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한옥 철거사례



전주 한옥마을

4) 전략 4. 한옥의 적극적 활용

‘한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하고, 신축 또는 매입 한옥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한옥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지원한다. 이는 한옥과 한옥마을을 관광자원화하여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한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관·유치원·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외교공관·대사관저·해외 무역관 등의 일부를 한옥으로 조성하는 ‘HAN(韓) HOUSE’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순창 귀래정 고택 및 다도체험 ■



■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

4. 성과 및 의의

‘신한옥 플랜’ 보고를 통한 제도개선과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마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010년 6월 ‘한옥마을 단지로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둘째, ‘한옥의 멸실방지’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0년 서울시 체부동 일대에 대해 한옥 보전형 재개발 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시행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2010년 6월 ‘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 시 양호한 한옥의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공시설의 한옥 도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2010년 6월부터 지자체 한옥사업 공모·지원을 실시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신한옥 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거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처럼 농어촌 경관에서부터 우리 국토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구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제 7 절

국토환경 디자인정책의 기본원칙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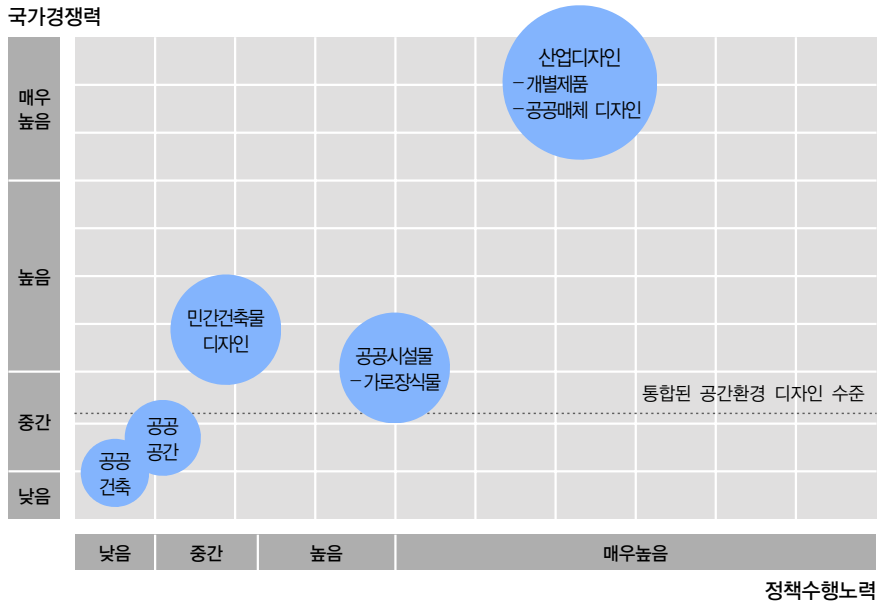
1. 추진배경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사회적 발달에 따라 좋은 건축, 좋은 공간환경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인 경쟁력이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 우위의 도시를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디자인 전담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디자인정책을 추진하거나 자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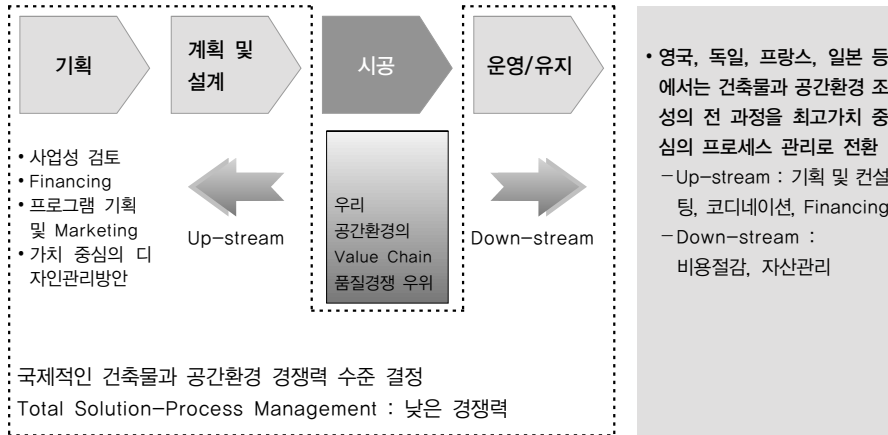
그러나 총체적인 디자인정책이 없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개별 디자인요소에 대한 행위기준 규정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잡은 예산·설계변경 등으로 역량 있는 전문가의 초기참여 배제’, ‘건축·토목·도시·기계·전기 등 각 분야별·업종별 통합된 디자인 관리부재’, ‘디자인가치보다는 가격이나 실적 중심의 계획가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좋은 디자인의 건축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관리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디자인 강국실현을 위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물론이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일터, 삶터, 놀이터를 이루는 국토환경 전반의 가치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디자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토환경 디자인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과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29】 국가경쟁력과 국가 차원의 디자인 기준 관계



【그림 30】 건설 프로세스 단계별 공간환경 관리

2. 추진경과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는 건축디자인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2008년 12월 초안을 마련하였다. 용역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2008년 10월 16일 NGO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거환경연합, 주거복지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등 각종 시민단체 대표 26명은 건축디자인 기준설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이후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8년 10월 21일 한국관광공사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건축디자인 기준(안)에 대해 12월 마지막 주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장은 2008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건축디자인 기준(안)을 결정하고, 2009년 1월 9일 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회의와 합동연석회의 등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준비한 ‘건축디자인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2009년 5월 15일 제1차 ‘건축디자인 기준 사전 검토회의’를 열어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에 ‘명칭과 용어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과 ‘디자인 리뷰, 디자인 감리, 전담조직 구성, 각종 영향평가 제도 통합 등에 대해 관계 법령과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검토할 것’ 등 기준(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2009년 5월 26일 열린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이를 검토하였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보완(안)을 가지고 2009년 7월 3일 제2차 ‘건축디자인 기준 사전 검토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했으며, 보완된 내용을 분과위원장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2009년 12월 8일 본회의를 통해 ‘건축디자인 기준(안)’을 심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종 결과물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2009년 12월 28일 고시했다.

3. 주요내용

가. 건축디자인 기준의 개요

건축디자인 기준은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환경 조성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서 일종의 ‘디자인수행 업무지침’이다. 즉, 기획, 계획·설계, 시공, 관리·이용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각 단계별로 디자인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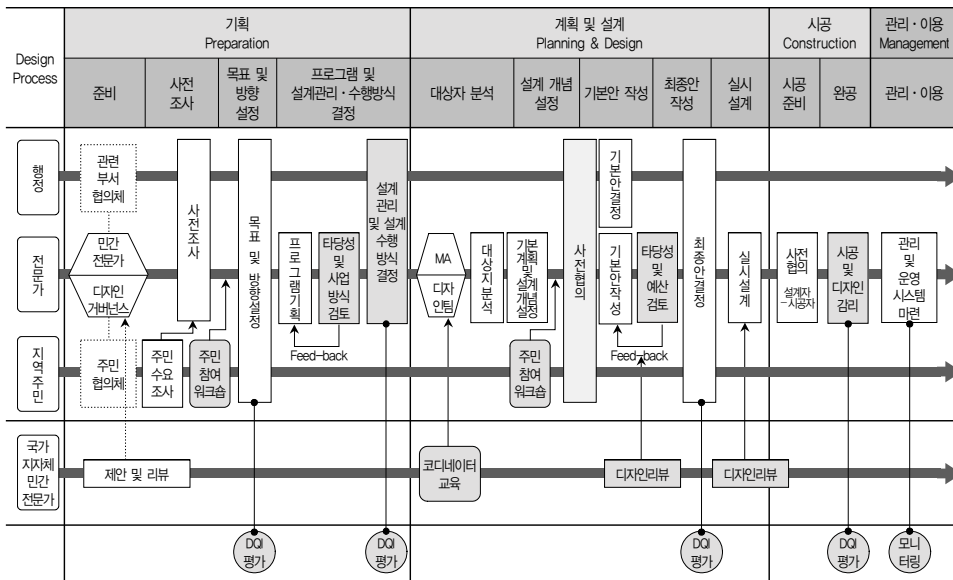
국가 건축디자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한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위원회나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가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건축디자인기준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나. 건축디자인 기준의 주요내용

위원회가 심의하고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건축디자인 기준(안)의 명칭을 ‘공공부문 디자인 업무기준(안)’으로 한다.
- ② 본 기준은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안 제2조).
- ③ 본 기준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공공기관 관련 사업 및 민간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안 제5조).
- ④ 본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 내 기준, 시설별 디자인기준, 또는 사업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안 제6조).
- ⑤ 본 기준은 5가지 주안점, 디자인 단계별 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구성된다(안 제7조).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설계자가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디자인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안 제19조).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역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한다(안 제23조 및 제24조).
- ⑧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디자인검토를 시행하도록 한다(안 제25조).

-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본 기준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평가지표를 도입한다(안 제26조).
- ⑩ 디자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디자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안 제27조).
-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 및 디자인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한다(안 제28조).



〈그림 31〉 단계별 기준

4. 성과 및 의의

건축디자인 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최초의 건축에 관한 디자인기준’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정책 추진 시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토환경디자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 건축디자인 기준은 우선적으로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적용될 것이나, 향후 지자체의 디자인기준 설정 시 가이드

라인의 역할도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디자인 기준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협력형 설계관리 시스템의 구축

기획 초기단계부터 다분야 전문가(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컨설팅, 환경 등)의 협력설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디자인 협력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② 디자인 사전리뷰 제도 및 사전협의 시스템의 도입

심의단계 이전에 ‘좋은 디자인’을 위한 실질적인 디자인 리뷰를 수행하고, 사전 협의제도를 도입하여 각 단계별 분야 간, 담당부서 간 협의를 통해 최적의 디자인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③ 건축디자인 기준의 웹기반 구축

장기적으로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웹기반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디자인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④ 디자인 매뉴얼 시리즈의 작성 및 지속적인 제공

디자인방법론과 디테일한 디자인 성능 등을 수록한 디자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협력적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디자인기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제 8 절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1. 추진배경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을 명시한 바 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국토환경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하자 중앙정부 차원의 디자인정책 구상 및 추진을 본격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국토환경 관련사업 역시 확산·추진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은 공공 이익의 증진과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 사업,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건축정책이 공간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전략으로, 국가 정책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시범사업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연계해 계획·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당위성 및 차별성과 함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력까지 확보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환경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국토경관 및 도시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국토환경디자인 향상의 선도적 모델로서 디자인 기획능력을 향상시키고, 많은 지자체의 참여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3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절차

2. 추진경과

가. 2009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됐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30일간 공모를 진행한 결과 20개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총 30개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7월 13일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2009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지평가와 디자인정책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 7월 27일 종합토론 및 조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총 11개의 시범사업지역을 확정해 2009년 8월 25일 위원회에 지정심의를 요청했다.

2009년 8월 25일 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국토해양부의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을 보고받고, '위원회 위상에 맞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고, 공모기간 연장, 심사기준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009년 9월 3일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4일 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을 심의하고, 이를 서면 의결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9월 7일 시범사업을 지정했다. 한편 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2009년 10월 13일에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2009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나.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2010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해 총 1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8개 사업이 신청했다. 국토해양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3월 17일 서면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에서 신청한 28개 사업 중 1차 12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2010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평가팀을 구성하고, 현장평가를 시행해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지정계획(안)에 대해 위원회는 2010년 3월 30일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의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에 대해 '시범사업 선정결과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총괄계획가(MP) 등 민간전문가의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범사업 평가기준 등 향후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2010년 4월 8일부터 13일까지 본회의 서면심의회를 열어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

3. 주요내용

가. 2009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공모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국토환경디자인 향상의 선도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 많은 지자체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했다. 또한 사업추진 주체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각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지역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범사업의 응모계획을 수립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응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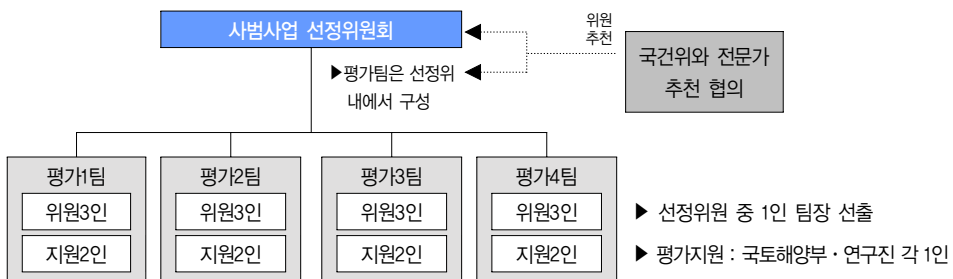
또한 2009년에는 계획 수립비용 지원사업으로 '공공건축', '주거건축', '공공공간', '기반시설', '수변공간 및 기타' 등을 그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시범사업 공모 접수결과, 총 1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8개 사업을 신청했다.

2) 시범사업 평가와 선정

공정한 평가·선정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건축·도시·조경디자인분야의 전문가·시민단체·국토해양부 담당자·모니터링 연구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과정 전반에 걸친 총괄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했

다. 선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됐고, 국토해양부 담당자(담당부서 과장)와 연구진(모니터링 연구책임자)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평가 전반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역할을 수행했다.

시범사업 평가는 응모 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대상지의 현지 실사를 바탕으로 서면평가(40%), 현지평가(30%), 디자인정책평가(30%)로 이뤄졌다. 시범사업의 선정은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종합토론 및 조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의, 시범사업대상지 지정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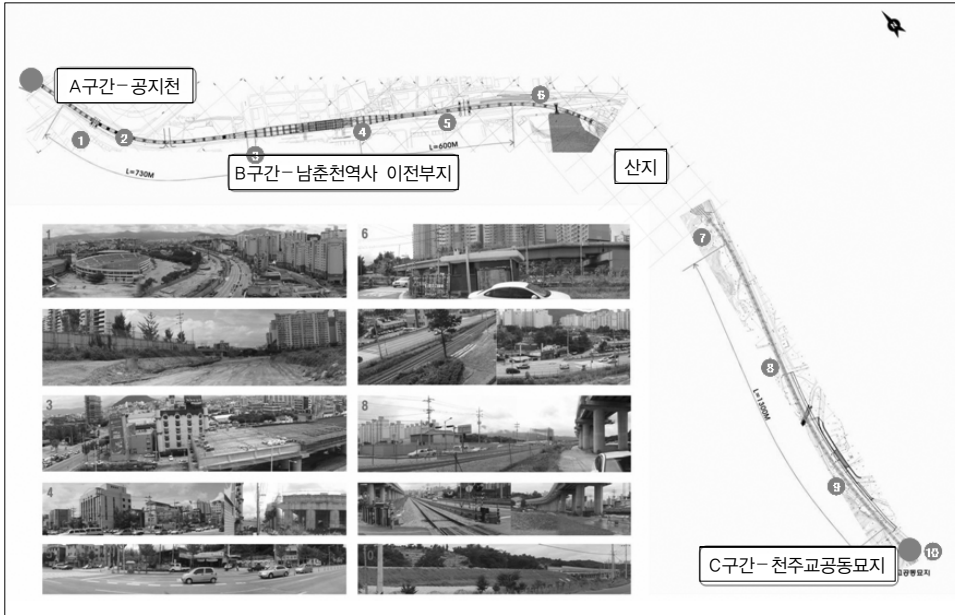


〈그림 33〉 시범사업위원회의 조직구성

3) 2009년 시범사업 선정 결과

2009년도 사업은 총 11개를 선정하였으나 광주시의 사업 철회로 최종 10개의 사업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업내용은 목포시의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과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 부산시의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영주시의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춘천시의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 대구 남구의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 미군부대가로 환경정비사업’, 대전 중구의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 사업’, 아산시의 ‘도시 속에 초록 빛 씨앗을 뿌리다’, 안산시의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 영암군의 ‘전통 주거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한옥상징 타워&박물관 건립’, 충주시의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이다.

지정된 사업에는 마스터플랜·기본계획·설계 등 계획수립비용으로 총 15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구축한 민간전문가 풀(Pool) 중에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였다.



┃ <그림 34> 춘천시의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 ┃

나.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공모

품격 높은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국토환경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정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2010년에도 계속 추진하였다. 기초·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응모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사업은 '녹색건축', '수변공간', '기반시설 및 기타'였다. 시범사업 공모접수 결과 13개 시도가 총 28개 사업을 신청했다.

2) 시범사업 평가와 선정

2010년 시범사업은 서면평가(70%), 현지평가(30%)와 종합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조경·도시분야 전문가 7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현장평가를 수행했다. 서면평가는 사업목표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추진체계, 기대효과를 평가(70점)했고, 총 28개 사업 중 창의적인 디자인개선 및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사 평가 대상지인 1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지자체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방문 및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30점)했다. 종합평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가점사항을 합산하여 선정위원회의 종합토론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순위를 결정했다. 건축·도시디자인 전담부서의 존재와 수변도시 비전공모 당선작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3) 2010년 시범사업 선정 결과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2010년 예산 규모 20억 원을 고려해 디자인 파급효과가 큰 사업 6개 사업을 지원했다.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하여 2010년도 시범사업은 조기에 시행기로 했다.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김해시의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기반’, 보령시의 ‘대천 해수욕장 워터프론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철원군의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포항시의 ‘해양강국 국립등대박물관 Redesign 사업’, 부산시 중구청의 ‘영주동 오름길 문화 만들기’, 청주시의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성’이다.



■ 김해시의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기반’ ■

지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순위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1.5~2억원씩 차등 지원하였고, 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도 지원하였다.

4. 성과 및 의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완성도 있고 향상된 결과물을 도출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최초 선정된 취지와 부합하는 결과물을 제시했으나, 추진 과정 중에 일부 혼란이 있던 지자체는 디자인 검토 과정과 사업 관계자 간의 협의 노력을 거치면서 조정됐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히 마스터플랜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 기획능력 및 건축디자인 향상이라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소기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이 일회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의 관련 사업 및 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고 통합적인 계획수립과 실현수단의 다양화를 검토하였다.

향후 디자인관리 방안으로 민간전문가의 지속적 활용, 사업 담당공무원의 연속성 확보, 디자인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지자체도 많았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디자인기준 수립,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추진,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향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①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연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을 건축조성 측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의 세부추진전략에서 가로환경, 고가구조물, 도시공원, 철도역사 활용, 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과 함께 지자체 디자인 기획과정 강화, 전문가 참여활성화 방안, 총괄계획 기능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대상 및 추진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②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목표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비전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표인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에 부합하도록 하며, 시범사업의 목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런 목표에 따라 시범사업은 지역고유의 장소디자인을 실현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공공공간·주거지·기반시설·수변공간 등 지역의 특징적인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주요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1차 지원사업에서 지역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통합디자인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유도해야 한다.

제 9 절

기타 추진과제

1. 공공건축 품격향상 및 효율적 관리

가. 추진배경

1) 공공건축의 현황

세계적으로 국가의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고품격·저에너지형 도시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의 도시환경은 높은 경제수준에 비해 도시브랜드 순위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도시경쟁력 평가(Anholt)는 도시의 국제적 지위·공공건축의 품질·공원 등 공공공간의 매력도 및 장소성 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은 도시경쟁력 평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2009년 기준 전국에 약 14만 3,000여 동의 공공건축이 조성돼 있고, 공공부문 건축공사 건설비용 기성액은 약 13조 6,000억원으로 주거를 제외한 전체 건축사업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이후 민간분야의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분야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 공공건축의 문제점

① 과대·과다시설 조성 및 이용자 불편 초래

타 지역과 경쟁적으로 최고의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장의 전시행정으로 인해 공공시설이 대형화되는 반면,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 ‘대중교통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보차동선이

혼재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교통사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례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② 획일적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않은 디자인

파출소,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 대부분이 ‘표준설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인접한 건축물, 가로환경, 공원 등 도시 공간환경에 대한 고려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③ 설계 및 시공과정의 체계적 관리 부족으로 품질 저하

민간건축물은 설계자가 준공 때까지 설계 의도대로 시공 여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반면, 공공건축물은 설계납품 이후에 참여가 배제되어 설계의도 및 품질 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공사 발주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에 대한 종합적 기술검토가 부족하여 부실공사 또는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④ 저탄소 녹색건축 분야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조성사례 부족

에너지효율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전면유리 커튼월 등 외관 위주의 에너지 낭비형 공공청사 신축이 급증, 최근 신축된 5개 지자체 청사(’05~’09)의 평균



높은 단차로 접근성 미흡



노약자·장애인 배려 부족



주변환경을 고려치 못한 입지선정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획일적인 디자인

┃ 공공건축의 문제점 사례 ┃

1인당 에너지사용량(2,197kgoe)은 전체 지자체 평균(989kgoe)의 2배 이상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추진경과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9월에서 10월까지 공공건축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공공건축 자문단에서 도출된 주요 안건을 바탕으로 2010년 4월에서 10월까지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 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본 과제와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2010년 1월 6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했고, 2010년 1월 14일 ‘공용청사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설계기법’에 대한 검토회의와 2010년 1월 29일 ‘공공건축의 에너지효율화 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해 이를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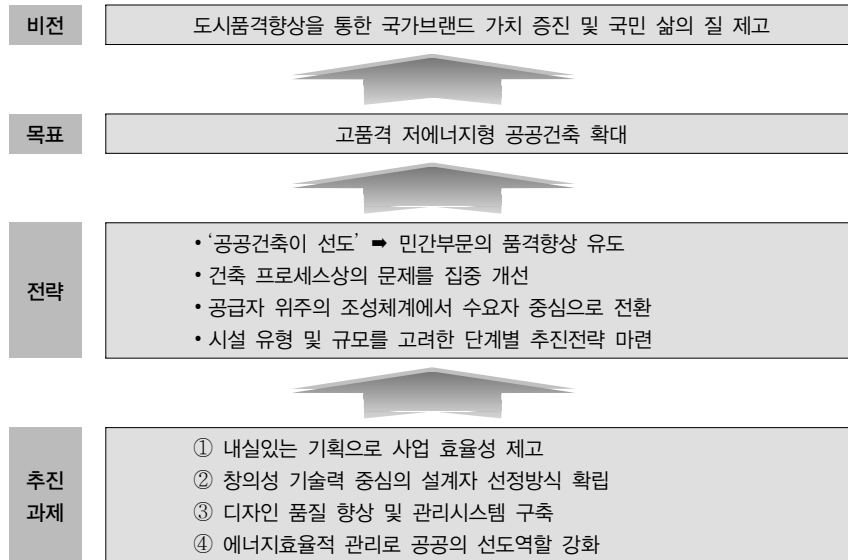
2010년 2월 25일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3월 10일부터 22일까지의 용역 입찰 공고와 2010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의 용역입찰 재공고를 통해 2010년 4월 14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4월 15일 ‘공공건축 개선방안의 수립’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5월 28일에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골격 등 연구성과를 검토했다. 이후 연구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발전시켰는데, 2010년 6월 1일, 6월 1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효율 관련 문제점과 원인, 2010년 6월 9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발주제도’, 6월 22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디자인품격향상’ 부문을 살펴봤다. 2010년 7월 9일에는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10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효율 제고’ 부문을 검토했다.

2010년 11월부터 최종 용역결과인 공공건축 품격향상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실시했고, 2010년 12월 20일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2011년 2/4분기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다. 주요내용

1) 목표와 전략



┆ <그림 35>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한 목표와 전략 ┆

2)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① 내실 있는 기획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초기 기획단계의 전문가 지원, 타당성조사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한다.

② 창의성·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방식 확립

토목기술용역과 구분되는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과 기술력 평가 위주로 발주방식을 개편한다. 따라서 현행 턴키제도, PQ제도 및 낙찰자결정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을 도입·활성화한다.

③ 디자인품질 향상 및 관리시스템 구축

기획 및 설계의도가 건축물 완공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심의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후설계관리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공공건축 초기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에서 시공 전 단계까지 디자인품질을 지속적으로 자가 진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DQI)을 개발·운영한다.

④ 에너지 효율적 관리로 공공의 선도역할 강화

우선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 중기 절감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확대 등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강화하고,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라. 향후계획

공공건축의 품격향상 방안은 도시환경 및 생활기반시설로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서 소외된 채 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공공건축가 도입, 턴키제도 개선 등의 관련 제도 개정을 유도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 공공건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관리단은 공공건축의 입지·규모, 발주방식, 에너지 효율성 등에 관한 자문과 타당성조사 의뢰·검토, 사업간 중복 및 연계 필요성 검토,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한 토목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개선방안을 담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공공건축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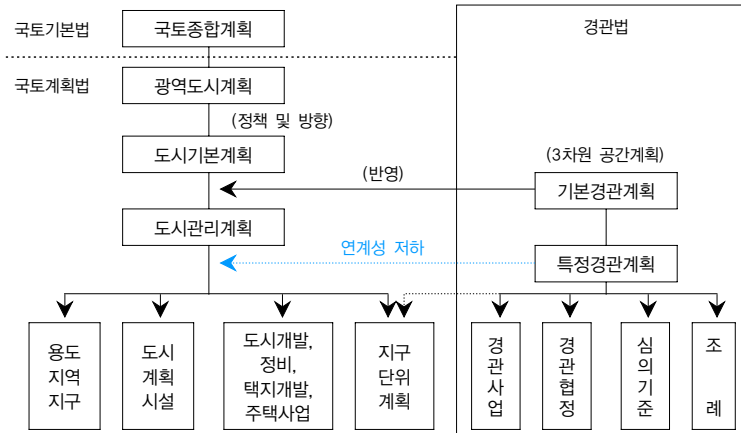
2.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가. 추진배경

현재 건축물과 도시의 디자인 등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품격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준과 추진체계는 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경관 관련 법제도나 계획이 중복·상충되고, 계획과 개별사업 간 정합성이 없어 사업 추진 시 혼란이 가중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종 경관 관련 사업을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특색을 살

린 장소 중심의 통합적 경관관리가 어렵고, 그 실효성 역시 부족한 형편이다.

도시경관의 품격향상을 위해서는 경관관련 법제도 간 위계를 정립하고, 각종 사업의 통합적 경관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 바 있다.



〈그림 36〉 국토계획법과 경관법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은 경관 관련 법·제도정비 등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도시경관의 품격향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나. 추진경과

위원회는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9월 도시경관 관련 전문가인 이정형 중앙대 교수 등 12명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8차례 자문단 회의를 시행해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과업지시서(안) 등을 마련했다.

2009년 9월 3일 열린 제1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이진숙·최두남 위원을 비롯 자문단과 위원회 기획단이 참여해 ‘도시경관 향상방안’ 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단 운영 방향 및 토론과제를 논의했다. 논의한 사항은 ‘부처별 영역 문제점’, ‘경관법의 문제점’, ‘바람직한 도시모델

재설계 및 실행기준 마련’, ‘운영자(행정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방안’, ‘간판 현황 및 문제점’ 등이었다.

2009년 9월 17일 열린 제2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 향상방안’ 의제 도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09년 10월 8일 개최된 제3차 자문단 회의와 동년 10월 22일 열린 제4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에 대한 세부과제 담당을 선정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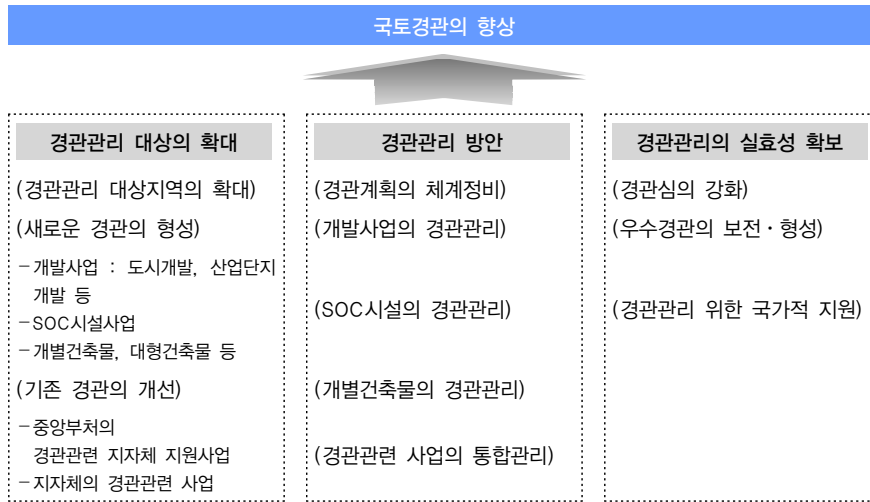
2009년 11월 5일 열린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세부과제 중 ‘경관 관련 계획 간 위상 정립 및 통합 실행방안 제시’와 ‘중앙부처별 경관 시범사업의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2009년 11월 19일 열린 제6차 자문단회의에서는 ‘한국 국토경관의 바람직한 미래상 설정’, ‘기획단계의 디자인업무 강화 및 민간전문가 활용방안’, ‘옥외광고물의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등 세부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를 논의했다.

2009년 12월 3일 열린 제7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세부과제인 ‘도시경관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첨단 도시개발 사례’와 ‘국토경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인력체계 구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09년 12월 17일 열린 제8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세부과제인 ‘국토경관에 관련되는 다양한 법제도의 통합적 방안’과 ‘자발적인 지역사회운동 측면의 활성화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집중 토론했다.

위원회는 자문단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3월 과업지시서(안)를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했고, 국토해양부는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10년 9월 8일 관련회의를 소집해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 연구내용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연구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 주요내용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은 ‘국토경관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에 따른 전략으로 ‘경관관리 대상의 확대’, ‘경관관리 방안’,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 등을 설정했다.



【그림 37】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

1) 전략 1. 경관관리 대상의 확대

특별·광역시 내 구·군 및 경제자유구역청까지 경관관리 대상지역으로 포함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도시개발·정비,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특정지역의 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의 경관관리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중점관리 대상 SOC시설을 정하여 디자인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그리고 건축디자인시범사업,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기존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각종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전략 2. 경관관리 방안

우선 법령별로 정합성이 떨어지는 각종 경관관련 계획들의 위계를 정리해 경관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사업별 경관관리를 위해 사전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심의 추진, 경관상세계획의 수립지침 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주요 SOC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 심의 추진 및 디자인기준과 디자인품질지표(DQI)를 준비한다. 개별건축물의 경관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더불어 각종 경관 관련 사업들이 지자체의 기본경관계획과 맞아떨어지도록 관리하고, 부처별 사업의 중복 해소를 위해 관련사업의 연계·통합 방안도 마련한다.

3) 전략 3.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관심의를 내실화하고, 우수경관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경관사업·협정에 대한 예산보조 및 전문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건축유산+문화시설
(도시재생)

ㅣ 런던 ㅣ



공간환경+문화프로그램

ㅣ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ㅣ



도시재개발, 이미지쇄신

ㅣ 파리 미테랑 프로젝트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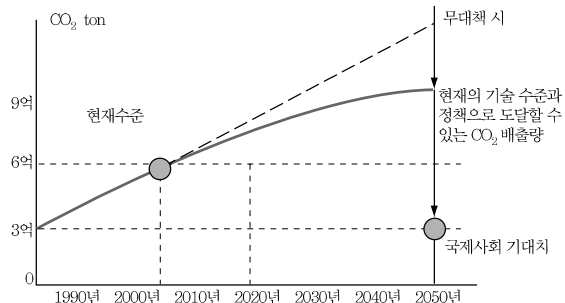
라. 향후계획

위원회는 상기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을 한 후 2011년 대통령 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저탄소 건축물 실현

가.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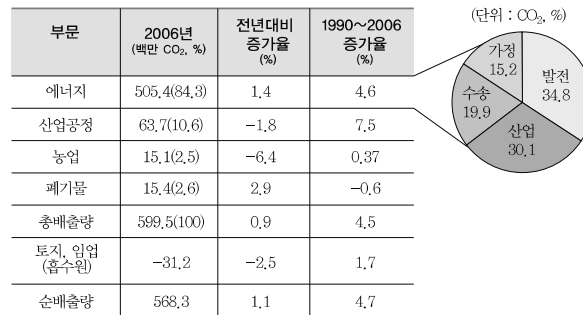
2009년 덴마크(코펜하겐) 유엔총회에서 에너지감축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등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급등락과 자원 고갈에 대해 저탄소 녹색



ㅣ <그림 38> 향후 국내 온실가스 배출전망 ㅣ

성장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4억 7,500만톤, 2006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1990년부터 2007년까지 113% 이상)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 건축은 산업, 수송과 함께 3대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주택 5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요관리, 기술개발에 의한 탄소배출 감축방안은 미진한 실정이다. 더불어 교토의정서 채택과 덴마크(코펜하겐) 유엔총회의 온실가스 감축 준수로 인하여 건축분야에 할당될 의무 감축수준이 향후 경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큼 상당한 부담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9】 산업별 CO₂ 배출량과 증가율

따라서 G20 정상회의(2010. 11) 개최를 계기로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도시환경의 구축과 에너지절감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과 저탄소 건축물¹⁾의 탄생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나. 추진경과

위원회는 세계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개최해 저에너지 공동주택 모델,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끊임없이 논의해 녹색건축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 1)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건축설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부하를 담당하게 하고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건축물

이를 바탕으로 2010년 6월부터는 기존건물 리모델링 촉진 및 보급형 저에너지 공동주택 모델 개발과 녹색금융, 녹색 주거문화 보급 등에 주요 안건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공동주택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방안’ 및 ‘일반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방안’에 대한 주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및 유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건축물 실현방안’에 관한 실천전략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다. 주요내용

저탄소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방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을 최대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기준과 방출 저감목표를 연차적으로 상향조정(주거 2009년 10%, 2010년 15%, 2020년 100%)하여 최종 목표 연도인 2020년에는 모든 신축건축물의 탄소배출량 제로(0)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는 합리적인 개편 및 브랜드화를 통해 미국 LEED, 영국 BREEAM, 일본 CASBEE와 같은 국가적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에너지 효율향상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자발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라. 향후계획

녹색건축·도시 구현을 위한 저탄소 건축물실현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적 이미지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건축의 설계기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수준향상과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건축 및 관련 녹색산업의 시장 확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의 협의 및 조정 등을 거쳐, 향후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및 그린인프라 마련,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유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방침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저탄소 녹색건축물 실천전략 마련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4.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

가. 추진배경

학교시설의 설치와 관리 부분에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을 전담하는 담당부처와 협의가 부족하여 도시 공공시설과 상호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인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지역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개별 시설사업 단위로 계획·구성되거나, 시설물들을 일률적으로 나열해 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시설을 지역 전체의 차원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에 학교시설이 지역의 중심생활공간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위원회는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4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실시('09.9.18, '09.10.9, '09.10.30, '09.11.13)하여 학교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및 미래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의 복합화 등의 안건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역중심 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중·개축을 통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를 자체 수시과제로 진행하였다.

다. 주요내용

‘학교시설 복합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재 학교시설이 지역 커뮤니티를 결집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 과정 부재, 유지관리비용 및 계획변경에 대한 예산 미확보, 교육청·지방자치단체·학교장·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 조율 및 반영 불가, 학교 유지관리 권한 귀속에 따른 지역 차원의 지속적 관리의 미흡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시설을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독립적인 공공시설 조성방식에서 지역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로,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조성체제로, 개별·단기 사업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견지한 장기적인 유지·관리체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학교시설을 지역의 주요 공공건축물의 일부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지역 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과정을 보완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발전방향과 상호 연계해야 한다.

또한 주체 간 협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참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고, 관리·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권한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시설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단계별 종합전략을 구상하고 지역이 중심이 된 리뷰(review)와 모니터링(monitoring) 등의 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네덜란드 학교중심의 지역시민생활공간



핀란드 공간환경 교육

이러한 조성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커뮤니티 지원 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한 통합예산 편성 및 지원, 공유재산관리법 등 학교시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라. 향후계획

학교시설을 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장·학생·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업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바탕을 둔 공공 주도의 통합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전담부서 설치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 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주요 사례로 학교시설의 선도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5. 해외도시개발(도시수출) 활성화

가. 추진배경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세계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 주거공간은 점점 더 집중화·집단화하는 경향이 있다. 조만간 세계인구는 70억 명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도시화는 급속히 진전할 것이며 도시개발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다.

해외도시개발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로 진출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제 포트폴



▮ 해외 도시개발(도시수출)사례 발표회의 ▮

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등 세계경제여건으로 볼 때 해외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에는 토목, 건축, 플랜트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신도시, 복합단지, 플랜트가 주를 이루었다. 2010년의 경우 716억 달러로, 2006년 165억 달러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우리의 해외건설은 그동안 플랜트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도 중동 및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향후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사업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플랜트사업 위주의 수주에서 탈피해야 하고 건설시장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주요한 대안으로 해외도시개발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개발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과 풍부한 실적경험을 가지고 있다. 단기간의 개발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수준이다. 대규모의 도시개발과 저비용의 개발방식은 우리나라만이 가진 장점이다. 건설분야의 앞선 기술력은 정보화 능력기반의 U-시티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도시개발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경과

위원회는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시작하여 동년에는 6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입법발의 중인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국토해양관 파견현황 및 역할, 해외수주현황, 국내외 도시수출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앞으로의 진행방향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5차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민간기업 해외 도시개발 사례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해외 도시개발과 관련된 주된 쟁점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국토해양부 및 유관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건설협회 등)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천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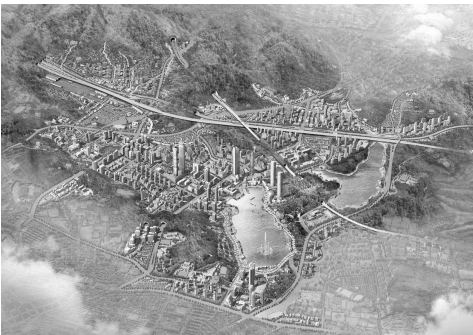
2010년 11월 말 이후, 각 분야별로 세부적 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ODA의 실적 현황과 운영방향, ODA와 해외 도시 개발의 연계방안,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 대상으로 추진현황, 추진과정, 장애요인, 정부지원방안 등이 될 것이다.

다. 주요내용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교류와 진출을 다양하게 이루어 왔다. 민간기업의 측면에서는 신사업발굴과 시장개척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는 외국과의 교류와 기술 및 사업지원을 위해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해외도시개발은 공공의 인식과 지원체제가 미흡하여 최소한의 활동만 이루어졌고 민간의 경우는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나 민간의 한계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지금까지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존 해외도시개발에서 당면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보 부족 등 현지 네트워크 부족, 법적 근거 미비, 초기사업분석 미흡, 보증 및 금융지원 미흡, 국가적 지원체계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해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는 중국 쑤저우 신도시 개발 시 정부참여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위험을 제어하고 성공을 담보하였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간 협력기조 구축, ODA, EDCF 등 공적자금과의 연계,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해외도시개발 지원특별법 추진, 중앙콘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의 구축 등을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 광교신도시 조감도 ■



■ 베트남 호치민 나베신도시(GS건설) 조감도 ■

라. 향후계획

해외도시개발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이며 한국문화의 결정체로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파워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연관산업효과가 상당히 큰 분야로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도 효과가 크다. 국내 건설 관련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자 해외의 고용창출 효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개발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도시를 관리할 경우 우리 기업의 진출과 문화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와 관련전문가 등의 협의 및 조정 등을 거쳐, 앞으로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계획이다.

6. 건축행정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발주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수준 저하, 설계경기의 비공개 심사로 인한 로비와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 증폭, PQ 제도로 인해 젊은 신진 건축사들의 참여 곤란, 건축사의 디자인 감리 권한배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자 인·허가 등 건축행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과도한 규제 등을 중점 발굴·개선하여 국민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초년도인 2009년 상반기에 건축행정 제도개선을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위원회는 건축행정 제도개선을 위해 2009년 3월에 16개 시·도 18개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어 건축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토록 하였다. 시·도로부터 77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183건 등 총 26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를 법령별로 구분하면 「건축법」 소관 89건, 「건축사법」 소관 9건, 「주택법」 소

관 43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관 21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관 14건, 「도시재정비촉진법」 소관 8건, 기타 법령 소관 76건 등이다.

위원회 기획단은 2009년 6월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검토과제 229건, 자체종결 과제 31건으로 분류를 완료하고, 2009년 7월에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한편, 건축행정제도 개선과제는 위원회의 최명철 위원, 최두남 위원, 류춘수 위원 등이 과제를 전담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 9월에는 제도개선 자문단(15명)을 구성하고 가칭 건축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를 담당하는 분과와 불합리한 제도·규제개선을 담당하는 분과로 나누어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건축행정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자문단 검토회의는 2009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14차례 개최하고 주요 건축행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토의와 검토를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시공감리와 디자인감리 분리에 관한 감리제도개선 자문단 토의결과 동 사항은 위원회에서 추진할 명분이 부족하여 과제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009년 11월에 건축행정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부처의 협의 결과, 검토과제 229건 중 208건이 회신되었으며, 수용 15건, 일부수용 7건, 불수용 124건, 기개선 중 36건, 장기검토 9건, 기 시행 17건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다. 주요내용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위원회 추진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건축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건축산업진흥법안을 작성하고 제도개선 과제로서 1. 건축인허가 처리 투명성 확보 2. 건축허가 관련 평가·심의제도 개선 3. 건축신고 제도개선 4.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5. 건축물 유지관리 개선이라는 5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개최한 제도개선 과제 자문단 토의를 통하여 1. 건축산업진흥법안의 법령명칭을 「건축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2. 건축인·허가처리 투명성 확보 과제는 세움터 운영상황을 보고 추후 검토기로 하였으며,

3. 건축인·허가 평가심의 제도개선 과제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운영상 문제로 5대과제에서 제외하고 4. 건축신고 제도개선 과제는 우선 개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5.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과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과제로 검토 중으로 5대과제에서 역시 제외하고 6. 건축물 유지관리 개선과제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행방안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PQ, 턴키, 설계경기 등 건축발주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의 중점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건축 품격향상과제에 포함하여 별도로 검토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건축신고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국토해양부, 지자체 및 건축사단체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 결과 신고제도 개선과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건축신고 제도개선에 대한 거시적 명분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라. 향후계획

2010년 4월 이후 건축행정제도 개선과제는 위원회의 대통령 보고회의 일정 등의 영향과 우선순위 등의 측면에서 타 과제에 밀려 위원회에서 더 이상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지만, 건축신고제도 및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와 건축디자인산업진흥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편의 증진과 건축디자인 향상 및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부 록 |

1. 위원 명단
2. 위원회 활동일지
3.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4. 기획단 직원 명단



부록 1

위원 명단

■ 위촉위원(13명)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정명원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명예회장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원장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류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송대 우송건축설계원 원장 (주)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인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 건축학부 부교수 대한건축가협회 명예이사 (주)아르키움 대표건축가 	안건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도시설계학회 고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 실장
양윤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서울시 행정부시장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영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서울시 디자인위 부위원장 김영섭+건축문화 대표
김광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장 	최두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DUNAM CHOI ARCHITECTS 대표
손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김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한국건축설계교수회 회장 한국여성건설인협회 초대회장
최명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남뉴타운 MP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채선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부엔지니어링 전무이사 서울시 건축기술심의위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이진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대 건축학부 교수 한국색채학회 회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당연직위원(16명)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통일부장관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방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제처장

부록 2

위원회 활동일지

일 자	내 용
'08. 06. 22	건축기본법 시행
'08. 11. 19	민간위원 사전간담회
'08. 12. 01	제1기 민간위원 임기 시작
'08. 12. 10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08. 12. 30	제1차 위원회 본회의
'09. 01. 16~17	제1차 위원회 워크숍
'09. 01. 20	위원회 현판식
'09. 01. 22	제1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09. 01. 30	4대강 국토환경디자인의 철학과 비전 논의
'09. 02. 06	4대강 수변공원 디자인연구 진행내용 및 추진방향 검토회의
'09. 02. 09	국가상징거리 기본구상 논의
'09. 02. 11	뉴하우징운동 과제도출 전략회의
'09. 02. 12	제1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09. 02. 13	4대강 진행내용 및 VIP보고안 검토회의
'09. 02. 14~15	뉴하우징운동 과제도출을 위한 T/F 및 기획단 워크숍
'09. 02. 19	4대강 수변공원 디자인연구 VIP보고안 검토 및 토론 뉴하우징운동 비전 및 목표 등 설정과제 초안 검토회의
'09. 02. 23	국가상징거리 업무조정 및 사업 진행방향 검토 및 토론
'09. 02. 24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자문회의
'09. 02. 25	뉴하우징운동 실행방안 마련 검토 및 토의
'09. 03. 04	제2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09. 03. 09	4대강 수변공원 디자인 적용예시 검토결과 및 VIP보고안 검토 및 토론 국가상징거리 계획이슈사업 및 문화재 관련사항 검토 및 토론
'09. 03. 12	뉴하우징운동 세부 실행방안마련 검토 및 토론
'09. 03. 13	제3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뉴하우징운동 추진체계 및 고려사항 검토 및 토론
'09. 03. 17	국가상징거리 이슈사업 관련된 기본구상 사전협의 및 토론
'09. 03. 20	뉴하우징운동 VIP보고전 사전점검 회의
'09. 03. 25	국가상징거리 서울시장 보고 및 협의
'09. 03. 30	제1차 대통령 보고회의
'09. 04. 09	건축 설계업무 발주제도 및 심의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토론

일 자	내 용
'09. 04. 15	제4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09. 04. 16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수립 등 후속조치 협의(T/F 7차) 건축 설계업무 발주제도 및 심의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09. 04. 21	4대강 수변공원 디자인 합동보고대회 VIP보고안 보고회의
'09. 04. 23	국가상징거리조성 상징 아이템 발굴협의 및 검토 건축설계 발주제도 및 건축 신고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토론
'09. 04. 27	제2차 대통령 합동보고회의(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09. 04. 28	제5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단 연구현황 보고 및 협의
'09. 04. 30	건축설계경기 주요현황 현안 및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및 토론
'09. 05. 06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 100선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09. 05. 09	제6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09. 05. 14	건축설계경기 운영의 주요현안 및 주상복합건축물 문제점 개선 토의
'09. 05. 15	제2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09. 05. 20	뉴하우징운동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09. 05. 21	건축설계 발주 및 건축물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문제점 개선사항 검토
'09. 05. 26	제1차 합동연석회의
'09. 05. 28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감리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토론 건축행정 제도개선 자문회의
'09. 06. 03	건축도시 문화포럼의 추진방향 및 운영계획 토의
'09. 06. 04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수립 업무추진 방향협의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자문회의 건축행정 제도개선 자문회의
'09. 06. 11	건축행정 제도개선 자문회의
'09. 06. 12	국가수도와 바다의 소통을 통한 녹색성장 해외전문가 초청토론(양투완 그랑박)
'09. 06. 17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자문회의
'09. 06. 18	제1차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09. 06. 19	해피하우스 추진방안 보고 및 토론
'09. 06. 22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수립 착수보고 및 토론
'09. 06. 25	건축설계경기 제도개선에 따른 세미나 개최 및 협의 디자인 보금자리 추진방안 보고 및 토론
'09. 06. 26	제2차 위원회 워크숍

일 자	내 용
'09. 07. 02	국가상징거리 관련사업 유관기관 업무협의
	디자인 보금자리 추진방안 보고 및 토의
	건축행정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09. 07. 03	제3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09. 07. 08	건축 3단체 간담회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전문가 자문회의
'09. 07. 09	건축디자인 보금자리 추진방안 보고 및 협의
	건축설계 관련업체 의견수렴 회의
'09. 07. 17~18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진과의 워크숍
'09. 07. 20	뉴하우징운동 중간점검 회의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미나 협의 등
'09. 07. 21	제2차 합동연석회의
'09. 07. 27~09. 01	국가상징거리 명칭 국민공고 및 심사 당선작발표
'09. 07. 29	주공 디자인보금자리 추진방안 수립
'09. 07. 30	세미나 연기, 발제내용 검토 및 토론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 선정관련 협의
	건축행정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09. 07. 31	건축·도시관련 4단체 간담회
	뉴하우징운동 자문단 세부 추진방안 논의 등
'09. 08. 01	서울시 광화문광장 준공결과 분석 및 향후 확장계획 토론
'09. 08. 05	녹색건축도시 조성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09. 08. 06	학교 등 공공시설활용 커뮤니티 활성화방안 자문회의
	건축·도시의 기획등 생산시스템 혁신방안 자문회의
'09. 08. 07	수변도시 비전공모 지침 및 심사위원 확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09. 08. 13	뉴하우징운동 자문단 세부추진방안 수립논의
	제2차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건축기본법 건축디자인기준 연구논의
'09. 08. 14	수변도시 비전공모 공고
'09. 08. 14~9. 02	수변도시 비전공모 참가자 등록
'09. 08. 17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점 보완 검토 및 토론
'09. 08. 18	해피하우스 위원 및 실무협의
'09. 08. 19	신한옥플랜 한국기술개발 기획위원회 보고
'09. 08. 20	건설업·단체 간담회

일 자	내 용
'09. 08. 25	제7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제3차 합동연석회의
'09. 08. 28	뉴하우징운동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검토 및 토론
'09. 09. 03	제4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디자인 자문단 운영방향 및 토론과제 논의
'09. 09. 04	제2차 위원회 본회의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공모방안 검토 및 토론
'09. 09. 07	국가상징거리 계획이슈사업 및 문화재사항 검토 및 토론
'09. 09. 10	통계로 본 건축설계 사업현황 및 위원회 자문단 구성과 운영방안 논의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 공모(9.10~10.9)
	건축행정 선진화 및 제도개선 자문회의
'09. 09. 11	디자인보급자리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
'09. 09. 14	국가상징거리 서울역 북부역세권 당선작 검토 등
'09. 09. 15	국가상징거리 조성 심포지엄 개최
'09. 09. 18	좋은 학교시설 만들기 자문회의
'09. 09. 21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자문회의
'09. 09. 23	건축행정 선진화 및 제도개선 자문회의
'09. 09. 25	뉴하우징 디자인분과위원 등 자문회의
'09. 09. 28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 실무부처 검토회의
'09. 09. 30	건축행정 선진화 및 제도개선 자문회의
'09. 10. 07	건축행정 선진화 및 제도개선 자문회의
'09. 10. 08	공공건축 효율화 및 디자인 품격향상 자문회의
'09. 10. 09	뉴하우징운동 전문가 자문회의
	좋은 학교 시설만들기 자문회의
'09. 10. 13	제4차 합동연석회의
	제5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09. 10. 14	분과별 토론 및 건축관련법 감리제도 비교설명 등
	보급자리주택 품격향상방안 VIP보고(안) LH 작성요청
'09. 10. 16	해피하우스 시범지역 공모결과 및 선정방안 검토·토의
'09. 10. 20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용역 부처별 실무부처 검토회의
'09. 10. 21	디자인감리 제도개선과 사후 설계관리 업무 연계성 검토 등
'09. 10. 22	건축디자인분과 과제별 담당위원 선정 및 과제검토 등 논의
'09. 10. 23	보급자리주택 향상방안 LH TF팀 킥오프 미팅
'10. 10. 25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자문회의

일 자	내 용
'09. 10. 28	한옥활성화방안 관계부처 업무회의
	제8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09. 10. 29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공모확정
'09. 10. 30	학생·교사·주민 등 사용자 중심의 학교시설 조성 자문회의
'09. 11. 03	제5차 합동연석회의
'09. 11. 04	건축행정 제도개선 과제 및 토의 등 자문회의
'09. 11. 05	건축디자인 도시경관계획간 통합실행방안 검토 및 토론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자문회의
'09. 11. 06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09. 11. 10	한옥육성방안 핵심주제 설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국가상징거리 시청 및 서울역권역 쟁점사항 검토 및 토론
'09. 11. 11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09. 11. 11~13	수변도시 비전공모 작품접수
'09. 11. 13	한옥활성화 방향설정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 회의
	학생·교사·주민 등 사용자 중심의 학교시설 조성 자문회의
'09. 11. 15	건축디자인진흥법 및 건축 인허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토론
	수변도시 비전공모 당선작 1차심사 선정(10작품)
'09. 11. 17	제6차 합동연석회의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방안 3차회의(LH초안)
'09. 11. 18	수변도시 비전공모 2차심사(순위 결정)
'09. 11. 19	한옥활성화 정책방향 중앙부처 관계기관 검토 및 토론
'09. 11. 19	국토경관의 바람직한 상 자문회의
'09. 11. 20	수변도시 비전공모 당선작 발표
	한옥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회의
'09. 11. 24	국가상징거리 사업일정과 사업범위 등 검토 및 토론
'09. 11. 25	한옥건축 생활화 산업화 심포지엄 토론회 참석회의
'09. 11. 17	새로운 삶과 디자인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09. 11. 23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자문회의
'09. 12. 03	건축디자인 교육의 인력지원체계 구축방안 검토 및 토론
	도시경관 통합적 개선과제 자문회의
'09. 12. 04	국가상징거리 아이덴티티 논리정립 검토 및 토론
	디자인보금자리 VIP 보고안 및 뉴타운 2.0 추진방안 토론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 자문회의
'09. 12. 08	제3차 위원회 본회의

일 자	내 용
'09. 12. 09	가칭 건축디자인진흥법 제정 논리와 건축행정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토론
'09. 12. 10	건축디자인 기본계획(안) 심의 결과통보
'09. 12. 17	건축디자인 관련 법제도 통합과 주민참여방안 검토 및 토론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자문회의
'09. 12. 18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 관계기관 의견협의 및 토론 등 신한옥활성화 방안강구 자문회의 도시수출 국가전략 구상정리 자문회의
'09. 12. 23	세우터 운영현황 보고와 건축디자인진흥법 제정 검토 및 토론
'09. 12. 29	제3차 위원회 워크숍
'10. 01. 06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감방안 자문회의
'10. 01. 06	후보과제 풀 및 부처별 업무 보고내용 중 안건 발굴 검토회의
'10. 01. 07	건축 3단체 간담회개최 건축분야 발전방향 의견수렴 등을 위한 건축 3단체 간담회개최 수변도시 비전공모 당선자 예비모임 및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방안 제도개선 협의 (LH, 국토해양부) · 토론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 내용수정 관계기관 실무회의
'10. 01. 08	2010년도 제1차 합동연석회의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개소식 사전준비 관련부처 실무회의
'10. 01. 13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방안 자문회의 강 중심국토 재창조를 위한 친수지역 활용방안 보고서 작성방안 업무협의 제1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정책조정분과회의
'10. 01. 14	공용청사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설계기법 검토회의 및 토론
'10. 01. 18~22	강 중심국토 재창조를 위한 친수공간 활용방안 보고서 초안 검토회의
'10. 01. 21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10. 01. 25	제2차 합동연석회의
'10. 01. 25~28	강 중심국토 재창조를 위한 친수지역 활용방안 전문가회의
'10. 01. 29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방안 관련회의
'10. 01. 30	해피하우스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완료
'10. 02. 01	해피하우스 홈페이지 개설
'10. 02. 02	전주 덕진구 인후 2동 해피하우스 센터개소
'10. 02. 05	강 중심국토 재창조를 위한 친수지역 활용방안 보고서 보완내용 검토회의
'10. 02. 08	제3차 합동연석회의
'10. 02. 10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제3차 워크숍
'10. 02. 22	건축행정 제도개선 자문회의

일 자	내 용
'10. 02. 24	국가상징거리 교통처리대책 및 종합계획 자문회의
'10. 02. 24	대구 서구 평리 3동 해피하우스 센터개소
'10. 02. 25	공공건축 품격향상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10. 03. 02~05	보금자리주택 생활맞춤형주택 수요조사(LH)
'10. 03. 03	제4차 합동연석회의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제도개선 방안협의(LH, 국토해양부)
'10. 03. 10	건축행정 제도개선 자문회의
'10. 03. 11	서울 마포구 성산1동 해피하우스 센터개소
'10. 03. 12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방안 디자인 시범단지 제안서 국제공모(LH, 국토해양부)
'10. 03. 25	안전발굴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10. 03. 30	제5차 합동연석회의 공공주택의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완료(LH)
'10. 04. 05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방안 디자인 시범단지 국제공모(LH, 국토해양부)
'10. 04. 12	해피하우스 업무처리 지침시달
'10. 04. 13	제4차 위원회 본회의 제6차 합동연석회의
'10. 04. 14	해피하우스 활성화방안 관계기관 회의
'10. 04. 15	공공건축 품격향상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보고
'10. 04. 19	제5차 위원회 본회의
'10. 04. 20	제7차 합동연석회의
'10. 05. 03	제3차 대통령 보고회의
'10. 05. 04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중 안전발굴 자문회의
'10. 05. 07~08	제4차 위원회 워크숍
'10. 05. 12	건축정책기본계획 고시
'10. 05. 19	제8차 합동연석회의
'10. 05. 20	녹색건축 실현방안 자문회의
'10. 05. 25	공공건축 품격향상 에너지 효율제고 자문회의
'10. 05. 26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디자인 시범단지 국제공모 공개 프리젠테이션(LH, 국토해양부)
'10. 05. 27	저출산 고령사회 안전발굴 자문회의
'10. 05. 28	공공건축 품격향상 자문회의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디자인 시범단지 국제공모작 선정(LH, 국토해양부) 녹색건축 실현방안 자문회의

일 자	내 용
'10. 06. 01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연구진 실무회의(건기연)
'10. 06. 03	저탄소건축물 실현방안 자문회의
'10. 06. 03	4만불시대 건축·도시환경전망 대응방안 자문회의
'10. 06. 08	제9차 합동연석회의
'10. 06. 09	공공건축 발주제도 연구진 실무회의(건도연)
'10. 06. 10	저탄소 건축물 실현방안 자문회의
'10. 06. 11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부문 연구진 실무회의(건기연)
'10. 06. 14	해피하우스 본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과업내용 자문회의
'10. 06. 15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환경 조성방안 자문회의
'10. 06. 17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방안 생활맞춤형 시범단지 제안서 공모(LH, 국토해양부)
'10. 06. 22	공공건축 디자인 품격향상 연구진 실무회의(건도연)
'10. 06. 23	저탄소건축물 실현방안(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회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방안 자문회의
'10. 06. 29	저탄소건축물 실현방안(일반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자문회의
'10. 06. 30	기획의 한국건축 토론회
'10. 07. 01	저탄소건축물 실현방안(신축건축물) 자문회의
'10. 07. 09	공공건축 발주제도 개선방안 국토해양부 의견수렴
'10. 07. 13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제고 부문 연구진 실무회의
'10. 07. 15	저탄소건축물 실현방안 국토해양부 의견수렴
	해피하우스 추진현황 관계기관 회의
'10. 07. 22	제10차 합동연석회의
'10. 07. 27	저탄소 공동주택 활성화방안 자문회의
'10. 07. 28	비주거용 건축물 저탄소 리모델링 촉진방안 연구용역 과제검토
'10. 08. 02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
'10. 08. 12	비주거용건축물 저탄소 리모델링 촉진방안 제안 평가회의
'10. 08. 16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합한 도시환경조성 자문회의
'10. 08. 19	기존 공동주택 그린홈 활성화방안 자문회의
'10. 08. 19	해피하우스 연구용역 자문회의(국토해양부, 건도연)
'10. 08. 26	친서민 생활도시 조성방안 자문회의
'10. 08. 27	기존 공동주택 그린홈 활성화방안 전문가 서면회의
'10. 08. 30	친서민 생활도시 조성방안 전문가 서면회의
'10. 08. 31	제11차 합동연석회의
'10. 09. 08	건축부문 안전발굴 자문회의
'10. 09. 09	도시부문 안전발굴 자문회의

일 자	내 용
'10. 09. 10	공공건축 품격향상 건축프로세스개선 및 에너지효율 제고방안 보고회의
'10. 09. 14	녹색건축 활성화방안 자문회의
'10. 09. 15	저층주거지 생활환경 개선방안 자문회의
'10. 09. 28	제12차 합동연석회의 소통과 실용의 도시정책 토론회(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나)
'10. 09. 29~30	국건위 워크숍 및 세미나
'10. 10. 08	건축·도시부문 안건발굴 자문회의
'10. 10. 13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백서발간 자문회의
'10. 10. 14	주거복지부문 안건발굴 자문회의
'10. 10. 18	공공건축 개선방안(안)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자문회의
'10. 10. 21	해피하우스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회의
'10. 10. 22~23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국건위 제5차 워크숍 및 세미나
'10. 10. 25	도시수출 추진방안 자문회의
'10. 10. 27	제1기 건축정책위원회 백서발간 자문회의
'10. 10. 29	제13차 합동연석회의 제1기 건축정책위원회 백서발간 간담회
'10. 11. 03	공공건축 개선방안별 관계기관 회의
'10. 11. 04	해피하우스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발전방안 정책간담회
'10. 11. 08	공원활성화방안 자문회의
'10. 11. 09	제14차 합동연석회의
'10. 11. 16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방안 관계부처 검토 및 토론
'10. 11. 29	제7차 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2010년 5월 | 3일 |



李대통령 “국격에 맞는 도시·주택 개발해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재…… ‘에너지절감형 주택’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올해 들어 위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고, 그동안 국격도 많이 높아졌다”면서 “우리도 이제 국격에 걸맞은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나 한 국적 특성은 살리면서 현대적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과 덴마크 등의 사례를 들면서 에너지 절감형 주택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만 해도 계속 (에너지 절감 주택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면서 “건축학회나 건설 업계에서도 그런 것은 잘 안하더라. 일부 있기는 한데 일본과 같이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덴마크) 스톡홀름 교외 도시에 있

는 아파트에는 비상계단을 마감도 하지 않고 콘크리트 상태로 그대로 해놨더라”고 소개한 뒤 “우리는 비상계단을 꾸미고 돌려 만든다”면서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검소하게 지으면서 에너지 절약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나를 기후 변화에 앞서가는 지도자로 보고 있는데 은퇴 후에 정상들이 찾아오면 에너지 많이 쓰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국격에 맞고 시대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에너지절감 주택 개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10명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업계 관계자,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태평 농림부 장관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2010년 5월 | 3일 |

한국일보

보급자리 ‘명품’으로 거듭난다 국가건축위원회, 디자인강화 계획

공공아파트인 보급자리주택이 세련된 디자인과 에너지 절감 기술이 가미된 ‘명품’아파트로 거듭난다. 옛 주택인 한옥도 ‘첨단주택’으로 저변이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급자리주택 품격 향상 방안’등을 확정했다.

우선 보급자리지구별로 디자인 주제를 정해, 산이나 강 등 주변자연환경과 연계된 단지를 만들고 돌출 발코니 등 눈길 끄는 외관 설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구조 변형과 리모델링이 쉽도록, 2차 보급자리지구부터는 집 내부 내력벽을 없앤 무량(無梁) 복합구조 기술을 적용하고 단열재와 창호 성능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 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보급자리주택은 1% 정도(3.3㎡당 10만원 안팎)의 분양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올해를 ‘한옥 르네상스’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농어촌 지역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5,000만원까지 저리 용자(5년 거치 15년 상환, 연

리 3%)해주기로 했다. 또 신규 택지에 지어지는 단독주택 일부는 아예 한옥마을로 짓는 ‘신한옥 플랜’도 확정했다. 앞으로 한옥도 아파트에 비해 냉·난방에서 전혀 뒤질 것이 없도록, 첨단 설계시공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도시설계 부문의 5년 단위(2010~2014년) 중기 전략인 ‘제1차 건축정책 기본 계획’도 확정 발표됐다. 위원회는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 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 문화 실현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6개 핵심 전략 및 18개 과제를 설정했다.

위원회는 첫째 목표인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과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녹색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원순환형 도시 기반 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조적 건축문화 분야에서는 지역별 대표거리(브랜드 거리) 조성, 건축자산의 관광자원화 등이 추진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2010년 5월 | 4일 |



‘싸고 편한 한옥’ 정부서 지원한다

‘신한옥 플랜’ 대통령 보고, 신공법 개발에 360억 투입, 공공택지에 시범마을 조성

한옥, 고루하거나 고색장연하다. 웬지 품격이 있어 보이지만 경북궁이나 북촌, 또는 남산 한옥마을을 가야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생활과 밀접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용도로 한옥을 되살리려는 민간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도 한옥 살리기를 선언했다.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는 신공법 개발을 지원하고, 들녘과 한옥이 어우러진 풍경을 곳곳에 만들어 국토 디자인을 새로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건축위)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한옥 플랜’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농촌이고 서울이고 뜯었다 하면 아파트를 지으니까 조화가 잘 안 된다”며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한국적 특성은 살리면서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옥은 건축비가 3.3m²당 1,000만~1,500만 원으로 일반 단독주택의 2~3배 수준이다. 비싸기 때문에 짓기가 망설여진다. 정부가 금융 지원과 신공법 개발에 대책의 초점을 맞춘 이유다.

건축위는 땅값이 싼 농어촌 지역에 한옥을 먼저 보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한옥 신축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

하기로 했다. 5,000만 원을 빌려주고, 5년 거치 후 15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연리는 3%로 시중은행 대출보다 저렴하다.

중구난방식 개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도 개발 보급한다.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는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해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축위 표현대로 ‘좁고, 불편하며, 비싸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60억원이 투입된다. 방화·방재·방습·방충은 물론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공법 개발이 목표다. 연구개발이 끝나는 2014년 후에는 현재의 건축비에서 최대 40%까지 줄이는 게 목표다.

•5년간 건축 밀그림 완성=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10~2014년)’을 확정해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전략으로 국토 경관과 디자인, 기술, 산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다.

1차 계획은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도시환경 개선 ▶녹색 건축·도시 구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 6대 핵심전략을 선정했다. 전략별로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이나 지역별 건축문화 대표 거리 조성 등의 18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0.05.04, 남궁옥·권호 기자〉

2009년 3월 | 30일 |



경복궁 - 한강 구간 ‘국가상징거리’ 조성

국가건축정책위 첫 회의…… 뉴하우징 운동 등 추진

정부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인 경복궁에서 한강까지 약 7km 구간을 국가정체성과 국민자부심을 표출하는 이른바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과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뉴하우징(New Housing) 운동’과 함께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수변공간 디자인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구간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럽고 멋있는 대표거리’로 조성키로 하고, 현대사박물관 등 역사·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한편 기존 시설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광화문~송례문’ 구간에 비해 확장된 것으로, ▲광화문권역(경복궁~청계천)의 국가역사문화의 중추공간 ▲시정권역(청계천~송례문)의 수도 도시문화의 중심공간 ▲서울역권역(송례문~서울역)의 국가수도의 관문·교류 공간 ▲용산권역(서울역~노들섬)의 미래신성장 동력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에너지 주거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주택에 최고의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뉴하우징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 사업의 하나로 영국의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등과 비슷한 형태로 임대주택에 저명한 국내외 건축가가 설계한 우수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이른바 ‘디자인 보금자리’ 사업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와 병행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수변공간 디자인 사업을 통해 하천과 주변공간을 품격있는 국토환경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파리 재개발 계획인 ‘그랑프로제’(Grand Projet) 등과 같이 서울을 문화도시, 녹색도시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는 서울시가 조성중인 광화문 광장,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중인 국민대한민국관 건립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마스터플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 심의와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기구로 이날 첫 회의에는 정명원 위원장 등 민간위원 13명과 함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

2010년 9월 | 27일 |

朝鮮日報

국가건축정책위,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도시 분야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는 2008년 출범해, 국토환경디자인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분야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들어 실용적 건축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했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가 '야만의 도시에서 야망의 도시로'라는 주제로, 협성대 이재준 교수가 '도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그린도시 조성'을 주제로,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 사장이 '삶을 디자인하는 도시계획과 정책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산·학·연·관의 대표가 참가해 지정토론을 하고, 방청객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등이 공동주관한다. 도시·건축분야 기술사 등 도시관련 산·학계 관계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정책제안들을 듣고, 품격 있는 도시와 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건축·도시정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누리 기자 nuri@chosun.com〉

부록 4

기획단 직원 명단

(2008.12. ~2010.11)

구 분	성 명	직 급(위)	원소속	근무기간
단장	신해경	국토해양비서관	대통령실	'08.12.01~'09.08.12
	신중호	국토해양비서관	대통령실	'09.10.01~
부단장	강성식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해양부	'08.11.17~'09.11.29
	박민우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해양부	'09.12.01~'10.09.26
	유병권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해양부	'10.10.04~
협력관	권기범	전문계약직(가급)	-	'09.01.13~'10.07.31
	이동환	전문계약직(가급)	-	'09.02.09~
전략기획과	김동천	과장	국토해양부	'08.11.17~'09.07.31
	윤중호	과장	국토해양부	'09.08.01~
	박록주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09.01.01~
	김학두	지방시설사무관	충청북도	'09.01.06~'10.01.05
	유영광	지방시설사무관	전라남도	'10.03.11~
	배성희	행정주사	국토해양부	'08.11.26~'09.11.01
	곽윤주	행정주사	국토해양부	'09.11.02~'10.11.08
	남선희	행정주사보	국토해양부	'10.11.22~
	최호룡	계약직	-	'09.01.12~
	김예니	계약직	-	'09.01.12~
	이주란	계약직	-	'09.01.12~'10.07.31
건축진흥과	엄정희	과장	국토해양부	'08.11.17~'10.07.31
	박승기	과장	국토해양부	'10.08.02~'10.09.16
	김성호	과장	국토해양부	'10.09.17~
	배성호	시설사무관	국토해양부	'08.11.17~'10.05.31
	정태권	지방시설사무관	부산광역시	'09.01.01~'09.12.31
	염준호	지방시설사무관	경기도	'09.01.05~'10.01.04
	빈태봉	차장	LH공사	'09.01.01~'09.12.31
	권혁삼	연구위원	LH공사	'09.08.03~
	황학용	지방시설사무관	경기도	'10.01.05~'10.03.10 '10.08.02~
	최민아	연구위원	LH공사	'10.01.01~'10.03.10 '10.08.02~

구 분	성 명	직 급(위)	원소속	근무기간
	전주영	연구위원	LH공사	'10.01.01~'10.03.10
	김연희	행정사무관	국토해양부	'10.06.01~'10.08.01
	오진수	시설사무관	국토해양부	'10.08.02~
	김영현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08.02~
건축 디자인과	박승기	과장	국토해양부	'08.11.17~'10.08.01
	이우제	과장	국토해양부	'10.08.02~
	최영수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08.12.31~'09.05.24
	김영식	지방시설사무관	서울시	'09.01.01~'09.05.24
	김상운	지방시설사무관	제주도	'09.05.25~'09.12.31
	강성일	차장	LH공사	'09.05.25~'09.12.31
	염철호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9.01.02~'09.12.31
	황학용	지방시설사무관	경기도	'10.03.11~'10.08.01
	유영광	지방시설사무관	전라남도	'10.01.01~'10.03.10
	김영현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01.01~'10.08.01
	전주영	연구위원	LH공사	'10.01.01~'10.03.10
	최민아	연구위원	LH공사	'10.03.11~'10.08.01
	김연희	시설사무관	국토해양부	'10.08.02~
	송중훈	지방시설사무관	서울시	'10.08.02~
	정은영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10.09.16~
	신민준	계약직	-	'10.08.09~
	도시 디자인과 * '10.08.02 페이지	안정훈	과장	국토해양부
이우제		과장	국토해양부	'10.03.02~'10.08.01
최영수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09.05.25~'09.12.30
김영식		지방시설사무관	서울시	'09.05.25~'09.12.31
김상운		지방시설사무관	제주도	'09.01.01~'09.05.24
강성일		차장	LH공사	'09.01.01~'10.05.24
조태홍		행정사무관	기획재정부	'09.01.02~'10.07.31
이희란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09.08.17~'10.07.31
송중훈		지방시설사무관	서울시	'10.01.01~'10.08.01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발행일 2011년 4월 30일
발행처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행인 위원장 이상정
감 수 한창섭
편 집 이동환, 윤종호, 정동환
참여자 오진수, 김연희, 정은영, 송종훈
권혁삼, 임현성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율곡로 56(우 110-310)
- 전 화 02) 397-8313
- 제 작 유엔아이(02-362-1511)